

1993년5월8일(토) 오전 10시

의사일정(제9차 본회의)

- 1.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 1.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1
 - o 휴회결의의 건(의장 제의) 6
- 2.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계속) 6
 - o 국무위원 인사 27
- 3.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계속) 27

(10시03분 개의)

○의장 이만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 보고사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 강천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10시05분)

○의장 이만섭 의사일정 제1항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서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한 가지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출석키로 되어 있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중요한 행사관계로 오전 회의에는 차관이 대리출석을 하고 오후에 나와서 질문에 답변하도록 승인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교섭단체 간의 협의를 거쳐서 의장이 승인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다섯 분입니다. 오전에 다섯 분 질문을 다 듣고 오후에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자유당의 김종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 민주자유당 소속 경남 창원시 갑 지구 출신 김종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세계는 21세기의 문턱에서 수많은 변화와 개혁의 소용돌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세계질서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문민정부 출범 이후 엄청난 변화와 개혁의 물결이 밀려오는 전환기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신한국창조를 위한 개혁의 물결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부패의 사슬을 끊어 버리는 뼈와 살을 깎는 고통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민주한국을 건설하기 위한 김영삼 대통령의 뼈아픈 개혁은 국가발전의 새 지평을 열어가기 위한 필연적인 진통이며 국가이익이 침해되어 있는 오늘의 세계 속에서 우리 한국이 새롭게 태어나 위대한 민족자존의 시대를 열어 가고자 하는 역사적인 작업인 것입니다.

분명 지금의 개혁은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90% 이상이라는 엄청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음과 동시에 세계 주요국의 언론으로부터도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금의 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국가발전의 새로운 기틀을 만들 수 있도록 개혁에 적극 동참하고 아울러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경주하고 법과 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개혁의 뒷받침을 마련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최근 연일 발생하고 있는 교육계의 구조적인 비리를 비롯하여 지금까지 성역으로 보호되어 왔던 일부 군 내부의 인사비리와 부패, 그리고 금융계의 비리현실을 보고 있노라면 본 의원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부정과 부패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피부로 절감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자녀를 대학에 합격시키기 위해 그리고 가슴에 별 하나 달기 위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뇌물이 오고 가는 공직사회의 현실에서 많지도 않은 월급으로 자녀교육을 위해 수십만 원을 지출하여 힘들게 살아가는 대부분의 봉급생활자와 오직 보국안민의 일념으로 묵묵히 군무에 전념하고 있는 대부분의 직업군인들이 느끼는 분노와 허탈감 그리고 일종의 배신감은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총리!

공직사회의 부정과 부패는 사회적 부패의 거울이자 그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획기적으로 근절시키지 않고는 사회 전체의 개혁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공직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직자 스스로가 마음의 자세를 전환하고 공직자의 행태가 민주적인 것으로 바뀌짐과 동시에 행정의 민주화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공직자들의 자발적인 의식전환도 법과 제도의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직사회에 대한 외부의 통제를 강화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보다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리께서는 부정과 부패를 근절하기 위하여 관련법규의 재정비를 포함해서 그릇된 행정관행과 기존의 제도를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문민대통령 취임사에서 향후 국가경영을 위한 3대 과제를 밝히면서 그중의 하나로 국가기강의 확립을 천명하셨습니다.

국가와 사회의 발전이 예측 가능하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질서가 존중되고 기강이 바로서야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민주한국을 건설하기 위한 개혁이 추진되는 전환기적 상황에서 최근 우리 사회는 군 탈영병의 시민살해사건, 정신병원화재사건 그리고 집중적으로 발생한 크고 작은 산불, 건국 이래 최대 참사에 해당하는 구포열차탈선사건 등 일련의 대형 사건과 사고를 경험하였습니다.

게다가 공직사회는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한 보신주의가 팽배한가 하면 무사안일주의 현상마저 나타나고 일부에서는 차라리 먹고 해 달라 하는 여론까지 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도 일반국민들의 경우에는 일부 계층의 무분별한 과소비와 사치풍조로 인해 계층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켜야 할 공중도덕과 법규마저 무시하는 무질서와 기강해이 현상이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이른바 총체적 기강해이에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강해이가 인재를 불러일으키고 빈번한 대형 사고가 사회 전반에 불안 심리를 가중시키게 된다면 이것은 분명 새로운 한국을 창조하기 위한 지금의 개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총리께서는 지금의 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이해진 기강을 바로잡아 응집력 있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공직자 보신주의를 근절시킬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이른바 한국병의 근원은 지난 30년간에 걸친 산업화과정에서 우리의 전통문화와 규범 그리고 민주시민의식을 상실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범의 상실이 전환기의 불안심리를 자극하고 일부 계층의 도덕불감증을 유발시켜 우리 사회에 부패구조를 심화시키고 가치관의 혼란을 초래하고 만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무엇보다도 전환기적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고 문민시대의 정신에 부응하는 새로운 가치관의 정립과 정신운동이 전개되어야 할 중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신한국건설을 위한 개혁이 성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민간운동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민간주도의 의식개혁운동을 적극 권장,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화합은 민족통일의 선결과제일 뿐만 아니라 총체적 국민역량의 강화를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국민화합의 최대 장애요인은 물론 지역갈등입니다. 지역갈등의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 간 균형발전과 인재등용의 형평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민화합의 문제를 좀 더 포괄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지역갈등이 반드시 사회경제적인 측면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갈등의 골 깊은 곳에는 정치적인 측면, 즉 그것은 다름 아닌 민주화운동과정에서 나타났던 불행했던 역사에 대한 한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총리! 이제 민주적 정통성을 확보한 문민정부 시대에서 우리는 4·19 이후 지금까지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민주화운동과정에서 파생된 시대의 아픔과 좌절에 대해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재평가작업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총리께서는 역사적인 문민시대에서 새로운 민주한국을 창조하기 위하여 국민화합적 차원에서 민주화운동을 재평가하고 이와 동일한 선상에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80년 광주항쟁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거론되고 있는 거창양민학살사건에 대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총리께서는 4·3 제주사건 등과 같은 냉전체제가 빚어낸 분단 현대사의 비극적인 사건들에 대해서도 문민정부시대의 정신에 기초하여 역사적 의미를 재평가하는 작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사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개혁의 전환기적 상황에서 최근 우리 사회는 사회기강이 해이해지는 틈을 타서 민생치안의 공백현상이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불법 음란비디오가 성행하고 약물복용과 유해환경업소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대부분의 언론이 각종 비리사건 보도에 치중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보도가 안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범죄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민들의 우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노동현장의 경우 과거 노동자 의식화와 노사분규를 조직적으로 주도하였던 세력들이 사

회기강이 해이해진 틈을 타 노동현장에 다시 침투하여 임금협상을 비롯한 노사문제를 어지럽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회사에서는 해직되었다가 다시 복직한 근로자들이 일을 하기 보다는 또 다른 노사분규를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과 같은 전환기적 상황을 교묘히 이용하여 민심을 불안하게 한다거나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해치고 불순한 의도하에서 노사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일부 세력들에 대해 어느 정도 실태파악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최근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빠짱꼬업계의 엄청난 부정과 비리에서 볼 수 있듯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폭력영화의 한 장면처럼 일종의 특권층으로 보호받고 있는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만일 그렇다면 이러한 환경에서 어떻게 일반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최대 관심은 처자식을 가정파괴범 등 강력범죄로부터 보호받는 것이 윗물맑기운동보다 더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국무위원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마피아조직과도 같은 폭력조직의 실태에 대해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시작으로 범죄와 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민생치안대책은 무엇인지 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오늘이 어버이날입니다. 이 기쁜 어버이날에 얼마 전 우리는 신문보도를 통하여 매우 서글프고도 가슴 아픈 사건을 접하였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팔순노모를 산에다 갖다 버린 현대판 고려장사건입니다.

아무리 오늘의 시대가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핵가족주의가 확산되고 물질만능을 추구하는 시대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반인륜적인 행위가 스스럼없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차제에 본 의원은 우리 정부의 노인복지정책이 국가복지관리의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연금제도를 확대 실시하고 노인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일종의 노인건강관리법을 제정하여 노인복지가 선진국수준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무주택 근로자들에게는 국민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하고

일종의 노인복지기금 등을 마련하여 노인복지대책을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방안 등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날 환경문제는 범지구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제분야에서의 우루과이라운드가 종결되면 그린라운드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수출을 기본으로 하는 대외 지향적 경제구조와 에너지 과소비형 산업구조를 갖고 있어서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규제에는 대단히 취약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프레온가스 규제와 이산화탄소방출 규제문제는 수출주도형인 우리의 산업구조 현실에서는 앞으로 수출상품에 대한 선진국의 수입규제 강화와 대외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환경문제가 이제는 국제적으로 무역문제화되어 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 정부는 국제환경협약에 대해 어떠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환경산업과 관련하여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이전문제는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는지 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관련 부처 간 기능조정문제인데 총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의 환경정책은 부처 간 이기주의로 인해 종합적인 대책 수립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단 수립된 정책도 부처간 손발이 맞질 않아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상수원종합보호대책을 한번 수립하려면 상공자원부 농림수산부 건설부 보건사회부 그리고 환경처 수산청 등의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만 하니 이러한 현실에서 일관성 있는 종합대책이 수립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구조하에서 환경처가 할 수 있는 일이란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다른 부서의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뒷수습이나 하고 책임만 떠맡게 되는 과거의 사례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총리께서는 현재 여러 부처로 나누어져 있는 환경관련 업무를 정책수립의 효율성과 집행의 일관성을 위해 부처 간 기능 재분배와 조정기

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근본적인 제도와 법령정비를 착수할 의사는 없는지 이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최근의 대학입시부정사건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의 교육현실이 원칙과 상식이 철저히 무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규범 그 자체마저도 상실되어 버리고 만 것이 아닌가, 그리고 과연 교육부가 대학입시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가 하는 강한 회의감마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육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과거에도 수많은 교육개혁조치가 있었습디만 이러한 개혁조치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없이 되풀이되었고 장관이 바뀌면 새로운 개선안이 만들어졌지만 불행하게도 우리의 교육은 파행을 누적시켜 오고만 있습니다.

장관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교육문제는 교육제도나 운영에서 비롯된 것도 있지만 왜곡된 교육열이나 직업관 취업 임금구조 등 복합적 요인들이 얽혀져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범정부적이고 범사회적인 공동노력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앞으로 설치될 교육개혁위원회는 관계부처 장관과 관련민간단체 대표들을 포함하는 민관협동에 의한 추진기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위원회가 과거처럼 형식적인 자문이나 건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심의·의결권을 가진 기구로 설치 운영됨으로써 개혁위원회의 이름에 걸맞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교육자치제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교육위원회의 기능강화방안과 대학입시제도 개선과 아울러 사학의 재정난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체육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최근 미국과 같은 주요 선진국들의 영화·음반분야를 중심으로 한 문화산업에 대한 침투는 매우 빠른 속도로 이루어져 이 분야의 유통시장을 상당 부분 잠식해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통상개방압력으로 이미 몇 년 전부터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주요 메이저들에 의한 문화산업 침투에 대해서는 아직도 대책마련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다른 분야에로까지 확산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의 국내업자들을 보호하면서 문화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수립이 시급한 현실인데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91년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 제3장에서는 남과 북이 문학 예술을 비롯하여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분단 이후 남북 간의 이질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남북문화교류는 정치·군사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민족동질성 회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특히 민족동질성 회복과 관련하여 민족문화의 원형을 복원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장관! 본 의원은 민족문화의 원형을 복원하기 위하여 남북 간의 학자, 문화예술인 등으로 구성되는 일종의 민족문화원형복원위원회와 같은 기구 구성을 북한에 제의하여 통일 이후 문화적 이질감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문화유형의 틀을 만들 수 있는 토대를 장기적으로 마련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처장관께 묻겠습니다.

최근 외신보도에 따르면 범세계적 환경보호운동을 비정부적 차원에서 전개할 국제녹십자가 지난 4월 20일 창설되어 고르바초프 구소련 대통령을 초대회장으로 선출하고 인류와 환경의 건전한 관계를 다지기 위한 녹십자현장을 채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이제는 환경문제가 정부의 차원을 넘어서 민간의 차원에서도 범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볼 때 우리 정부도 지금까지 환경보호운동을 주도해 온 각종 시민단체들 가운데 재야 민간환경단체와의 관계는 권위주의 체제하에서의 적대적 관계에서 벗어나 문명시대의 동지적 관계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부가 민간환경단체에게 환경정책결정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나아가 이 정책의 실천과 감시를 일부 위임하여 협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면 정부로서도 이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정책의 실효성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정부가 범국민환경보전운동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이들 운동에 대한 간접적인 재정지원방안으로서 기업체에서 민간환경단체의 환경운동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또한 국내민간단체가 국제환경보전운동의 차원에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쓰레기를 줄이자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폐기물관리체계는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시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부족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확장하는 문제를 포함하여 기존의 단순투자식 매립 위주의 처리방식에서 벗어나 선진국형의 종합적인 위생관리체계로 전환하는 문제가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광역별 위생폐기물처리장 설치정책을 추진할 때 부딪치는 지역이기주의를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는 매립지 선정 시 정부의 일방적 발표로 인해 소요사태를 발생시켰던 과거의 밀실행정에서 벗어나 입지선정과정에 있어서 자치단체와 인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함과 동시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매립지 설치운영으로 인한 환경상 영향을 장기적으로 조사 공개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의구심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김포 수도권 매립지의 운영에 따른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수도권 산업체의 정상조업이 지장을 받고 있는 사례를 볼 때 이제 하수처리장이나 쓰레기 매립지와 같은 환경기초시설들은 필수적인 사회간접자본의 하나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완벽한 안전처리시설을 건설하여야만 국토도 보전하고 산업생산활동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장관께서는 향후 하수처리장이나 쓰레기매립지 설치계획을 밝혀 주시고 이들 폐기물을 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하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활용 폐기물의 발생 및 수요, 정부와 재활용 기술정보의 수집 분석 공급을 통해 재활용자원의 유통거래를 촉진시키고, 나아가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일종의 폐기물유통정보센

터를 설치 운영할 의사는 없으신지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북환경협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한반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은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화와 도시화의 결과, 그리고 북한의 경우 지속적인 전시체제의 강화로 말미암아 많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생태계의 파괴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먼저 생태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남북 간 생태계공동조사 및 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향후 남북환경협력을 북한에 제의하여 이를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신한국를 창조하기 위한 김영삼 대통령의 개혁에 거는 국민의 기대는 매우 큽니다.

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의 역할과 제도적 뒷받침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욱이 공직사회의 투명성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깨끗한 정부를 만들기 위한 실천적 노력을 다함께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휴회결의의 건(의장 제의)

(10시33분)

○의장 이만섭 다음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여야 교섭단체대표 간에 합의를 본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휴회는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5월 10일부터 5월 17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계속)

(10시34분)

○의장 이만섭 다음은 민주당의 이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협 의원 민주당 전북 이리시 출신 이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총리와 국무위원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개혁의 과

정을 점검하고 그 성공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선도하고 있는 이 개혁의 성패는 모든 국민이 계속 열화와 같은 관심과 성원으로 참여할 것이냐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김영삼정부가 개혁의 첫 단계로 택한 과거청산에 대한 불변의 의지를 국민들에게 확고히 심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부정부패의 척결의 사정작업이 낱알이 국민에게 공개되어서 개혁이 성역 없이 중단 없이 계속되리라고 하는 예견이 가능해야 국민의 참여가 보장됩니다.

그런데 총리! 요즈음 벌어지고 있는 은행비리, 삐뚤꼬사건, 울곡사업, 군 진급부정 등 하는 수사마다 웬 비밀이 그렇게 많고 장애물도 이렇게 많습니까?

총리! 급한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정덕진 삐뚤꼬수사가 언제부터 왜 갑자기 비공개로 바뀌었습니까? 총리는 이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검은 당초부터 이 사건 관련자들의 외압을 막기 위해서 공개수사를 한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며칠 만에 이렇게 약속을 뒤엎는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성역 없는 사정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삐뚤꼬사건의 수사가 시작된 2, 3일 사이에 국회 주변을 비롯한 정계와 언론계에서는 신문에 불과하지만 여러 명의 관련자 이름이 입살에 오르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여론동향의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중에는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의 이름도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말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했습니다. 아마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쯤 벌써 쉬쉬하며 재미있게 소문이 퍼져 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이 사건 수사진행상황을 보고 받는 어제의 자리에서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성역 없이 파헤쳐라 하고 특별지시를 했는데 검찰에서는 왜 비공개로 국민의 의혹을 살 일을 하고 있는지 총리께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김현철에 관한 소문이 어찌다가 나왔는지, 그 진위가 어떤 것인지, 이 문제는 시급히 지금 당장 국민 앞에 밝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김영삼 대통령의 개혁추진에 큰 문제가 야

기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김영삼 대통령께서 왜 특별히 이 사건에 관해서 박관용 비서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게 되었는지 납득할 수 있는 이유 설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빠정꼬사건과 관련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다시 상세한 질문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지금 정부를 상대로 개혁을 따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오히려 이 국회를 사정과 개혁, 아니 정리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 때문에 몸가짐이 어색하다는 저의 솔직한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도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우리 국회 안에 있다는 L 모, K 모, D 모 등등 운위되는 바람에 더욱 그렇습니다. 토사구팽의 예비후보들 명단 같기도 해서 세태무상을 느끼기도 합니다.

요즈음 개혁정국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오늘의 실세들이 어제의 실세를 추격하는 실세들의 전쟁 같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6공 사령부가 있는 연회동에서 곧 일대 대회전이 있거나 없을까 하는 전황의 관측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 같은 허세들은 돌아가는 내막을 잘 모릅니다.

하기야 실세의 말씀 같습니다. 총리께서도 우리나라 같은 허세이고 개혁은 몇몇의 실세들이 주무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말이 난 김에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정말 허세입니까 아니면 실세입니까, 혹은 허세인 척하는 허허실실세입니까?

허세도 좋고 실세도 좋습니다. 오늘의 사정판과 개혁판이 돌아가는 정확한 사정을 국민들에게 자세히 밝혀 주는 총리가 되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개혁의 요청은 정확한 사태인식과 확고한 결단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개혁사정이 시작되자 온 사방에서 6공비리가 붓물 터지듯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부정부패는 가히 총체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정확한 인식은 이 총체적 비리의 근원이 6공의 절대 부패한 절대 권력에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총리에게 드리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부분적이고 표본적인 사정작업으로 이 총체적 부정부패와 비리를 다 척결할 수 있습니까? 6공의 총책임자였던 노태우 씨가 출석하는 가운데 6

공청문회를 열어야 합니다. 성역이 없는 사정과 개혁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여론이 절대적으로 이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또 여당이 6공청문회를 거부하는 공식적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과 언론사 사주들, 언론사의 고위간부들, 성직자, 주요한 재벌들도 재산공개를 해야 합니다.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비록 사인들이고 사기업이라고 하지만 김영삼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시작된 재산공개에 우리가 임했던 것처럼 자발적인 참여를 종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가 일부 언론사들에게 이미 종용한 바 있다고 하는데 지금껏 실현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부 언론사들 사주 중에는 언론을 방패로 막대한 재산을 모았고 그중에는 해외에 재산도피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서 국민의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총리는 두 전직 대통령의 재산공개에 대해서 본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하고 답변을 하셨는데 알아서 안 할 것으로 알고 포기한다는 말입니까? 혹시나 알아서 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의 말입니까? 정부의 정확한 희망사항을 분명히 국민들 앞에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셋째, 금융실명제는 부정부패를 막는 최고의 개혁장치인데 왜 즉각 실시하지 않고 유보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말대로 정말 할 생각이라면 딱 부러지게 정확한 실시시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실시를 선포할지 모른다 하는 추측들도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매관매직과 각급 선거의 금권타락을 철저히 사정해야 합니다. 인사와 선거는 국가의 기본 틀입니다. 심지어 면장 한 자리 하는데 2000만 원, 3000만 원을 바치는 것이 관행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농협, 의료보험, 교육의원, 모든 선거마다 어마어마한 금권타락현상이 있다는 것이 이미 천하공지의 사실입니다.

다섯째, 교통순찰·교사들의 봉투관행 등 아랫물맑기개혁을 언제 착수하며 언제 끝낼 계획인

지, 공직사회의 상납과 전별금 취임축하금 이러한 그릇된 관행을 일소할 수 있는 계획은 갖고 계신지?

지방에서 관급공사를 몇 사람이 나누어 먹고 세력가들의 정·관·경 유착의 병폐를 저지르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러한 일들을 청산할 것인지, 지방개혁의 구상과 전국 암행감사반의 활동실적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고통의 분담을 역설합니다. 그러면서도 정부투자기관의 이사장제를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관변단체에 계속 예산을 지원 증액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특히 이번 대통령취임식 때는 전국 지방의원들을 불러서 롯데다 위커힐이다 하는 최고급 호텔에서 숙박을 제공까지 했습니다.

각 도별로 비용을 분담할 것으로 압니다만 고통의 분담에 역행하는 처사는 아니었더냐 하는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과 지방에서 지출한 취임식 총비용은 얼마나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청소년들에 유해한 선정적 극장간판이나 포스터 만화 컴퓨터 비디오 등 정화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여덟째,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광주 측의 요구를 다가오는 5·18 때까지 해결할 방안은 세워져 있는지? 지금 그 문제의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아홉 번째로 국민분열의 망국적인 지역차별 지역감정 지역패권주의 이러한 것들을 청산할 구체적인 정책이 정부에 있다면 인사, 개발, 예산, 의식개혁, 행정 등으로 나누어서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융·인사탕평의 구체적 방안과 소외지역에 대한 한시적 특별배려책이 있다면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사정기관에 대한 사정의 개혁에 있어서 선결과제라는 것은 김영삼 대통령께서 강조한 일입니다. 검찰에 대한 외부감사나 내부감사를 한 실적이 있으면 그 결과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압과 경제적 유혹, 정실 등으로 검찰권 행사가 엄정치 못한 경우도 있었다고 장관 스스로 답변을 했습니다.

유신과 5, 6공을 거쳐 오는 동안 권력의 시녀, 경제인과 유착 등등 국민에게 많은 실망을 준 일

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에 특히나 앞장섰던 간부들 중에 아직도 검찰에 남아서 개혁검찰의 장애가 되는 인사는 없습니까?

유신검사 시녀검사 비리검사 등이 수출(遂出)되고 검찰이 개혁시대에 맞는 정도로 정화돼야 한다는 국민의 소리를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자체 사정의 구상과 검찰개혁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은행의 안영모 전 행장 비리수사에도 검찰 내부의 지연 요인이 있었다는 얘기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정덕진 빠짱꼬 비리수사에는 아예 내부자의 정보 누출을 차단하기 위해서 명단공개 엄포 등 사전에 치밀한 노력까지 있었다고 하니 검찰의 기강이 말이 아닙니다.

신문을 보고 저희들은 정말 놀랐습니다. 엄정한 자체 사정의 확고한 의지와 개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안영모 행장 수사와 관련해 묻겠습니다.

안 행장은 소위 6공 실세들과 유착된 사람으로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국민들은 6공 실세들의 부도덕이 개혁시대의 검찰에 의해서 백일하에 드러날 것으로 대단한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수사진전사항은 발표되지 않은 채 안 행장의 비자금을 수억씩 받았다는 국회의원들이 L 모, K 모, 전직 L 모 장관, 전직 L 모 청와대수석 등 보도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장관!

도대체 L 모는 누구이고 K 모는 누구입니까? 이 자리에서 수없이 많은 L 모 K 모 중에 어떤 의원입니까?

만일 그들이 혐의선상으로 떠올랐고 또한 언론계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어서 온 국민이 다 알게 되었다면 검찰로서 책임 있게 사실 여부를 확인시켜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사실이라면 그들에 대한 수사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도대체 안 하는 것입니까 못 하는 것입니까? 누가 못 하게 하는 것입니까? 외압입니까 내압입니까?

또 들리기로는 안 행장이 연행되던 날에 아침 일찍 집행을 서둘렀는데 검찰총장의 재가가 나지 않아서 한나절 동안이나 시내를 배회하다가 오후 늦게야 검찰청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재가가 늦어져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지금도 예

전처럼 청와대 같은 데서 수사범위가 지시되는 것입니까? 안행장사건의 수사진척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6공실세 관련설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관심에 부응해 주시고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금융기관에 대한 사정을 철저히 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말한 감사원장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행수사를 중단 축소 조정 없이 말 그대로 성역 없이 계속해 나갈 것인지 법무당국의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동화은행장 수사가 4월 27일을 고비로 갑자기 열기가 식었다는데 그래야 할 특별한 이유는 있었습니까?

같은 날 청와대사정수석도 은행수사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구실로 더 이상 않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혹시 청와대로부터 수사중단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닙니까? 항간에는 6공 실세인 아무개를 노렸는데 별 게 나오지 않아서 열기가 식었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사실 여부를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빠짱꼬수사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소문에 의한 김현철 씨 관련설의 진상은 무엇입니까? 수사검사들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보고에 따라서 마땅히 조사를 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역사적 국정개혁에 한 점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검찰의 명예를 걸고 사실이면 사실인 대로 소상하게, 아니면 아닌 대로 명명백백하게 가려 주어야 합니다. 반드시 자세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 외에도 정계인물들을 비롯해서 신문에 L 모, K 모, H 모, S 모 등등 관련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정말 무관한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피해입니다. 소문에 떠도는 인사들 중에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검찰에서 그 오보를 시정시켜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계관계는 물론 수사당국에 까지 빠짱꼬와 폭력범죄의 비호세력 유착세력이 있다고 하니 놀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검찰 내부에도 고위간부직이 정덕진 사업에 관련되어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는 얘

기입니다. 현재의 경찰수뇌부에도 수많은 사람이 바짱꼬 비자금수수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국민들의 인식입니다.

신문에서 검찰이 비공개조치를 취하니까 은폐하려는 것이 아니냐 하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의 당당한 태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진 씨 빠짱꼬자금 태림회 유입과정도 수사가 잘 진전되고 있습니까? 노태우 대통령의 동생 노재우 씨도 조사하거나 또 할 예정입니까?

김영삼 대통령의 성역 없는 수사지시에다가 국민적 관심이 고조된 이 사건인 만큼 빠른 시간 내에 중간보고를 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석방결의안이 부결되기는 하였습니다마는 이동근 의원의 구속사건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유죄 무죄를 떠나서 검찰이 형평을 잃었다 하는 지적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국회가 끝나면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하는 검찰의 태도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동근 의원에 대해서만은 즉각 연행 즉각구속 즉각발표가 이루어졌느냐, 이것은 당시 최형우 전 민자당 사무총장 사건의 보도를 진압하려는 그러한 방편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야당탄압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의혹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처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방송위원들의 임기는 법으로 엄격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비공식회의에서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위원들에게 중도사퇴를 종용한 것은 부당한 처사가 아닙니까? 위원 가운데 야당 추천인의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퇴했다는데 장관의 답변대로 정말 각자가 자유의사에 따른 것입니까? 대선의 공로자인 정원식 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내정해 놓고 하는 일들이 아닌지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TV프로가 축소되어서 부모들과 어린이들이 그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바라고 신문이 나오지 않는 주말에 방송뉴스까지 축소한다는 것은 재고되어야 할 일이 아닌가 묻겠습니다.

교육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대입부정사건이 문제가 되자 내년도 본고사를

모든 대학이 취소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대 계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건으로 오랫동안 마련한 교육정책이 이렇게 쉽게 오락가락해서야 되겠는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교조 해직교사들의 복직은 지금 실제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사채용 때 금품이 수수되는 관행 등 교육계의 부조리를 척결하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마련을 하셨습니까? 엇그제 TV에서도 교장승진에 1000만 원, 교감승진에 500만 원 하는 얘기들이 공공연히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대입부정과 관련해서 내무부장관에게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서 나머지 47명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수사발표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우 전 민자당 사무총장이 무혐의라고 한다면 사실상 사무총장을 물러날 이유가 있습니까? 검찰이 말하는 이 무혐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육부가 1400명의 부정입학 학부모의 명단을 표했습니다마는 그 결과를 가지고 성역 없는 수사를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에게 물겠습니다.

아폴로산업 국제전광 등에 다시 공권력이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부장관께서는 너무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이 공권력의 개입이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불씨를 던져 주고 그것이 또 해결할 수 없는 질긴 노사분규로 연장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날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강력한 대책을 세우라 했다고 해서 앞으로 5, 6공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러한 권력의 진압방책만을 사용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와 국무위원,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우리가 변화와 개혁을 회피하면 우리는 역사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혁의 당면과제로 부정부패의 척결을 들고 '부정부패의 척결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 결코 성역은 없을 것이다' 재삼재사 강조하시고 자신이 중단 없는 개혁의 선두에 설 것을 내외에

천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혁의 성패는 성역 없이 중단 없이 계속해서 국민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끌어내고 유지할 것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벌써부터 지금의 몇몇 실세들에게도 예외가 생기고 있습니다. 예외가 성역을 낳고 성역이 부정부패를 낳고 부정부패가 망국의 위기를 낳아서 역사를 의미 없는 반복으로 전락시킵니다.

TK들의 그릇된 전철을 PK가 새로운 실세들이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김영삼 대통령에게 무엇보다 이 실세들의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역사의 기회는 자주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를 허송하면 김영삼 대통령의 말대로 역사가 우리를 외면할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속기중단)

.....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부디 성역 없고 중단 없는 개혁으로 구국중흥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전 국민의 이름으로 기원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만섭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김기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김기도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자유당 경남 삼천포·사천 출신 김기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 의원님 그리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밖에는 아주 좋은 계절입니다. 5월입니다. 그래서 5월을 '계절의 여왕이다' 이렇게 말씀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 놓으니까 이 5월에는 '어린이날'도 있고 오늘과 같은 좋은 '아버이날'도 끼여 있고 또 앞으로 '스승의 날', '성년의 날'까지 겹쳐 다가올 것입니다. 이 좋은 계절에 구내식당에서 설렁탕 칼국수를 들면서 새로운 분위기 조성에 숭선수범하고 계시는 국무위원 여러분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한 가지 내각 쪽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래 총리나 국무위원들께서 답변하시듯이 그냥 아랫사람 써다 주는 메모나 답안지 가지고 줄 줄 읽어 내려 가시려면 그런 것은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고 철학이나 소신이나 확신 있는 부분은 오늘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확한 수치라든지 자료인용을 배제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국무총리!

3, 4, 5, 6공을 통해서 많은 경륜을 쌓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새 정부에 첫 국무총리로 취임한 70여 일 동안 대통령에게 ‘이런 것이 어떻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까? 있으시다면 언제 어떤 경우에 어떤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부산열차사고가 난 이후에 경부선 열차를 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국무위원 중에 누가 타 보신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본 의원은 지난 4월 18일 부산 사하구 보컬선 거장에 가보면서 한번 타 보았습니다.

타기 전에 마음이 그리 편치 않았습니다. 저의 집사람도 ‘꼭 왜 이 시기에 기차냐’ 이래서 약간 불평불만도 있었습니다. 타고 보니 기차가 워낙 고속으로 달리니까 커피잔 들고 있기가 불안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잘 가다가 푹푹 하니까 이거 어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심사가 편치 않은 순간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심정이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총리! 부산열차사고의 조사결과 최종적인 원인은 한마디로 뭐였습니까? 왜 그랬다고 합니까? 사고 뒤에 온통 사람 때려잡아 놓으라고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해야 국민들이 편안하게 예전처럼 기차를 타고 다닐 것 아닙니까?

부산열차사고 이후에 승객이 형편없이 줄어들어서 부산역의 경우는 본 의원이 알기에 하루 1억 원, 전국적으로 합하면 약 5억, 이로 인해서 막대한 국고손실의 차질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엿그제 저녁에 또 열차탈선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이래서 되겠습니까? 술선수범, 고통분담이 어디 따로 있는 일입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정확한 사고원인 그리고 그에 대한 완전한 복구작업이 완료되고 거기다가 우리가 바로 우리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그 기차가 안전하다고 타고 다녀야 제대로 굴러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러면 또 기차 안전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다 해 가지고 그 방향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

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분담 얘기를 제가 잠시 드렸습니다. 그것을 꼭 온 국민들에게 산술적으로 나누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더 많이 가진 자가 더 많이 양보하는 미덕 그래서 서민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희망을 공유할 수 있는 확신이 서고 장래 비전이 보여야만 진정한 의미의 고통분담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5년간 민주화를 내걸고 국가기강이 엉망이 돼 버렸잖았습니까? 뭐 했습니까? 긴장감은 없어지고 사회통합능력은 없어져서 전부가 ‘내 것 내놓아라!’ ‘한꺼번에 다 내놓아라!’ 이런 것 아니었습니까? 다행하게도 지난 두 달여 동안 대통령이 해야 할 일, 국가가 가야 할 일, 정부가 챙겨야 할 일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챙기셔서 정리해 가지고 대도를 보여 주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진운의 이 기회에 자신감을 가지고 밀고 나감에 있어 국회와 정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총리의 견해가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총리께서 보는 선진사회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계십니까?

본 의원은 한마디로 여러분이나 제가 공직에서 퇴임한 뒤에 지하철이나 시내버스나 일반택시를 잡아타고 친한 친구의 아들이나 딸 결혼식에 하객으로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회를 제 나름대로 정의해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어떠합니까? 지하철은 떠밀려서 타기 어렵고 시내버스는 타서 밝히다 일다 보고 택시는 제 시간에 잡을 수 없고 오너드라이버를 하고 가면 차 세울 곳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전국의 지하철 철도 시내버스 택시와 관련된 새 정부의 계획을 밝혀 주시고 현재 운영체계에 대한 보완점도 아울러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문제 한두 가지만 지적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교통문제를 통치권차원에서 해결하겠다고 선언한 김영삼 대통령의 선거공약을 되새기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존 건물에도 적용시킬 수 있도록 주차장법을 대폭 강화할 용의가 있으신지?

둘째로는 택지초과소유에 대한 부담금 때문에

이 도시가 숨 쉴 곳이 없어요. 200평 이상 택지 초과소유지역에 만약에 주차장을 할 경우에 면제될 수가 있는 것이지?

세 번째로는 모든 국공유지를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공무원의 복무자세가 한때는 먹고 일 잘한다 또 언젠는 먹고도 일도 안 한다, 이제는 먹지도 않고 일도 안 한다, 이렇게 보는 언론의 지적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나라의 살림을 맡고 있는 공무원의 의식구조가 이렇다고 하면 정말 큰일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신한국정서에 맞는 공무원상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각료 여러분!

어려운 일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이북에서 월남한 어느 분은 자기가 삼팔선을 넘어 월남할 때 메고 왔던 룡색을 자기 안방에 걸어놓고 어려울 때 그것을 쳐다보며 회상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목회자는 새벽이 되면 늘 자기를 위해서 기도드리다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회상하면서 자기의 새벽시간을 열어 간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곁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5시 30분이 되면 일어나서 뛰기 시작하는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총리께서는 경제활성화, 사회개혁을 위해서 몇 시부터 일어나 움직이고 계십니까? 듣고 싶습니다.

빠짱꼬 얘기는 앞서 선배 의원들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과연 이대로 우리 정부가 영업허가대로 가게 할 것인지 개혁할 것인지만 밝혀 주시고, 법무장관께서는 말썽 많은 빠짱꼬 관련 수사에 관해서 오늘 현시점에서의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수사결과를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섭 의장, 황낙주 부의장과 사회교대)

교육부장관!

‘행복이나 성공이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아리스토텔레스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이 마치 명문대학의 입학이요, 사법고시 합격이요, 고급아파트요, 자가용 승용차요, 별자리인 것처럼 왜곡되어 온 우리의 교육현

실을 어떻게 바로잡아 보시겠습니까?

조국근대화, 선진조국창조를 내걸고 잘살아 보기 위해서 배우고 가르쳐 온 우리의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2000년대를 목전에 둔 마당에 바르게 살아가는 교육으로 바꾸어 볼 용의가 없으십니까?

교육부장관!

일전에 총리께서 이 국회 본회의 국정정보를 통해서 재수생문제는 점진적으로 누적된 것을 해소할 것이라고 점진적이라는 표현을 쓰셨고 대학 정원의 조정권문제는 단계적으로 대학에 일임을 하실 것이고 입시난은 완화하실 것이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부장관께서는 이 점진적이다 단계적이다 완화다 하는 표현에 관해서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과외 얘기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비밀과외가 있는 것은 다 아는 주지의 사실이고 제가 듣기에는 소위 수백만 원씩 하는 쪽집게과외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 쪽집게과외는 공교롭게도 답안지 유출과도 관련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불법과외를 뿌리 뽑을 수 있는 장관의 방안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부장관! 사학의 발전정책의 하나로서 기여입학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계십니까?

이 문제는 기여입학자 수를 정원의 일정비율로 엄격히 제한을 하고 기여입학자의 성적관리를 철저히 해서 졸업을 쉽사리 보장하지 않는다면 기여입학제도가 꼭 부정적이지만은 않는다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견해를 여쭙어 보는 것입니다.

왜 교육부장관은 교육부 안팎을 발각 뒤집어 놓는 듯한 인사를 한다고 신문에 요란하더니 정작 전문직 등용은 제대로 못하고 말았습니까? 그렇잖아도 관료화되고 경직되고 극히 보수적이고 더러는 부패했다는 교육부 공무원 분위기에 자리만 몇 자리 바꾸고 말았습니까? 앞으로 보완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은 단기적인 생산기술에 치중한 나머지 창조적이고 기술발전의 토양인 기초과학 육성을 소홀히 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21세기 선진국 진입을 앞두고 난관에 봉착한 우리 과학기술교육 진흥을 위한 재원확충방안이라든지 과학기술교사 자질향

상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 관련해서 교육방송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이 방송학회가 주최하는 교육방송위상에 대한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KBS, MBC, SBS 기존 3개 채널 이외에 EBS교육방송이 제4채널로서 제대로 국민 시청자 속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장관, 크게는 정부 측의 대단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 문제에 대해 단편적인 답변하기보다는 돌아가셔서 총리 중심의 관계장관회의라도 한번 해 보시고 될 것이면 교육부 오 장관, 공보처 오 장관, 두 오 장관 재임 중에 제대로 된 교육방송을 만들어서 전파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의 말 하는 것 아닙니까? 투서, 모함, 중상…… 사이버언론의 보도 등등……

문화체육부장관!

올해가 '책의 해'이지 않습니까? 예상대로 책이 잘 팔리고 많은 국민들에게 제대로 읽히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일 매일 아침저녁 신문 잡지 라디오 TV에서 보고 듣고 읽을거리가 쏟아지고 있는데 누가 서점에 가서 책 사 볼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에서 여쭙어 보는 것입니다.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오는 93년이나 늦어도 2002년까지는 부산에 아시안게임이 유치됐으면 하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88년에 서울에서 올림픽이 있었고 올해는 대전에서 EXPO가 있고 5년쯤 해서 부산에 아시안게임 정도가 펼쳐진다면 지역적 균형개발의 면에서도 바람직할 것 아닌가 본 의원이 생각해 봤습니다.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에 관계되는 일은 우리가 입만 떼면 문제요 글로 써도 청소년문제로 이렇게 타이틀을 쭉 잡아 버립니다. 인식부터가 부정적이요 문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입시제도가 요즈음 같고 고학력우대 사회풍토 속에서 청소년들이 별도리가 있겠습니까? 거기다 정책은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문화체육부는 또 자기대로 단편적인 대응책으로 무슨 방안이 나오겠습니까?

오늘날의 우리 청소년들은 텔레비전 라디오 신

문 잡지 영화 VTR 등 상업적 영리추구를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 대중매체에 거의 무방비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장관께서는 이의 제도적인 보호장치와 청소년 건전놀이마당의 확충방안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 간에 문화교류 때문에 일본영화의 수입문제가 가끔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국민여론의 수렴과정을 거쳐볼 용의가 있으신지? 아울러 일본의 우리 교포 1세, 2세, 3세가 수십만 명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우리 국내방송을 서로 가져가서 하겠다고 야단이고 일본에서는,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방송을 수십만 교포가 못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방송과 관련되니까 공보처장관께서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에게 잠시 묻겠습니다.

일전에 TV드라마에까지 장관이 직접 출연해서 노사문제 조정역할을 하게 된다는 기사를 본 의원은 아주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2, 3일 전에 조용하다고 하던 노사현장에 새 정부가 들어 처음으로 공권력이 투입되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제와 오늘 아침 사이에는 사태가 심상찮아져서 기업 측은 생산차질로 하루에 수백억 원씩 손실을 보고 근로자들의 파업농성으로 노사분규는 확대일로를 걷고 있는, 모처럼 활기를 띠나 싶던 자동차수출은 막대한 차질이 생기고 그럼으로써 국제시장에서의 신뢰는 떨어지고 이대로 내주 초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관은 이번 노사분규의 경위, 수습방안, 향후 보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하도 최근에 개혁사정작업 때문에 일도 말도 많을 것 같아서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하나는, 군 인사비리와 관련해서 해군 공군의 전 참모총장이 별자리인사에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혹시 총장 되려고 땀 땀 곳에 돈을 갖다 준 것은 드러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교도소비리입니다.

본 의원이 하나하나 지적하지 않더라도 장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파악되신 대로 개혁차원에서의 교도소비리 근절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처 그리고 보사부장관에게 함께 묻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느끼고 있는 불편 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숨 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큰 줄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병원의 진료문제 역시 그 불편이 하나들이 아님을 잘 파악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잘 해소해 줌으로써 소위 말하는 생활정치 실현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충족되리라고 본 의원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개선방안을 묻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두부 콩나물 이런 것 먹는 음식에 못된 것을 섞어서 내다 팔고 있는 행위, 오물 폐수 버리다가 벌금 물고 며칠 안 돼서 다시 돌아서서 다시 갖다 버리는 행위, 아픈 사람이 써야 될 약에 제대로 함량을 채우지 않는 행위, 식품의 제조일자나 유통기간을 혼란시키는 행위, 두 여성 장관께서 재임기간 중에 한두 가지만이라도 확실하게 고칠 용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처장관! 어제 오늘 신문 텔레비전에 보니까 남의 집 유산을 둘러싸고 장학재단이다 선교재단이다 하는 소리가 나오는데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해명하십시오.

공보처장관!

사이버언론문제를 최근에 언급하기 시작했고 그에 필요한 법률적 제도정비를 계획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사된 사이버언론 실태를 상황 그대로 이 기회에 설명하시고 그 대처방안도 명확하게 밝혀 주십시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마는 지난 5년 동안에 언론·출판에 관한 정부의 입장이나 대처방안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피곤하고 짜증스럽게 느껴졌는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애기가 나온 김에 지금 한창 준비 중인 CATV 즉 종합유선방송국사업 가운데서 계획대로는 전국 116개 방송운영국에 뉴스를 다루는 CATV 지역기자를 두도록 돼 있습니까? 아니겠지요? 둔다면 그 숫자가 얼마나 될 것인지 참고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이의신청이 지난 12년 동안 통계를 보면 약 1300여 건, 그중에 처리된 것이 합의가 약 24%, 취하가 46%로 되어 있습니다. 합의가 24%인데 취하가 46%입니다. 배입니다. 취하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투서나 모함 이런 것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

이 일방적으로 기사화되었을 경우에 당사자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기 일쑤입니다. 피해자에게 변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하고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처장관! 대통령선거 때 공약한 지역민방문제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역민방사업에 관해서 해당 검토지역, 규모, 실시시기, 사업신고자의 자격요건 등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고 일전에 잠깐 보도됐습시다마는 SBS 즉 서울방송과 신설지역 민간방송과의 연관설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종합유선방송사업이 아시다시피 6공화국의 마치 이권사업인 양 발목을 잡혀 오다가 대통령선거를 넘기고 또 한 해를 맞고 이 한 해 중에서도 중반에 들어섰습니다.

공보처장관! 일부의 주장대로 이 케이블텔레비전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꼭 보고 계십니까? 지방이나 대도시나 이 황금알만 생각하고 명함에다가 딱 하니 케이블텔레비전사장 이것 한번 박자고 덤비는 줄부들이 있다는 소문은 들어 보셨습니까?

그리고 정부의 추진계획을 얼핏 보니까 허가해 줄 지역이 대도시와 도청소재지 중심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반 공중파 즉 KBS나 MBC나 이런 현재의 AFKN까지를 포함하더라도 대도시나 도청소재지는 그 공중파방송의 혜택을 제대로 보고 있는데, 또 케이블텔레비전까지 집중되고 태백산이다 지리산이다 덕유산이다 저 난시청지역에 가까운, 말하자면 강릉이다 목포다 진주 같은 곳 어찌 그런 지역을 9개 시범지역에라도 포함시킬 용의가 있는지 검토된 대로 지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나라의 방송구조는 특히 95년을 계기로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 95년에 무궁화호 인공위성이 위성방송을 위하여 발사되고 지역민방이라든지 또 계획되고 있는 각 지역의 종합유선방송이라든가 종교방송국까지 합해서 이에 필요한 엄청난 수요의 방송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학자는 한 해, 즉 95년에 2800에서 3000여 명의 방송인력이 필요하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전국에 방송기술공업전문대학 같은 것의 신설이 본 의원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의 검토 여지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고 방송환경 변화에 따르는 인력수급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애기가 나왔으니 TV에 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월에 완공된 예술의 전당 오페라 하우스에서 대통령취임 축하공연으로 ‘님을 좇는 하늘 소리’라는 뮤지컬 공연이 있었습니다.

신라의 무기, 대가야국의 소리, 즉 가야금 소리에 관한 줄거리였습니다. 문민시대에 걸맞게 소리가 무기를 잠재우는 주제였습니다.

한 두어 시간 본 의원도 가야금소리를 듣고 난 뒤 우리의 TV를 지켜봤습니다. 뛰고 쫓고 굴리고 비틀고…… 그것이 광란이요 난세의 음률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어쩌다 지난 5년 동안 우리 TV는 온통 대중의 인기야요차트 그리고 이쪽저쪽 10대 젊은 인기 있다는 사람만 이 TV, 저 TV, 그것이 전부 아닙니까?

한평생을 닦아 온 인간문화재나 기능보유자들의 기량이나 수준 높은 공연은 우리 TV에서 쉽게 감상할 수가 있었습니까? 안방용인지 성인용인지 가족용인지 포르노극장용인지 대중극장용인지 잘 구별이 되십니까? 시대의 흐름이다 유행이다 패션이다 시청률경쟁 때문이다, 이렇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지난해 언젠가는 스타라는 사람들의 사생활 벗기기 경쟁을 하다 보니 TV카메라가 어느 여인의 속치마 안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방송위원회의 준엄한 경고를 받고 국정감사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두 TV회사 사장이 바뀌었습니다. 기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시청률 경쟁에 재돌입할 징후마저 들리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경쟁하겠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벗겨서, 눅혀서, 삼각관계로, 울려서, 소리로, 조명으로, 울동으로, 불륜스토리로, 카메라장난으로……

공보처장관! 각별히 챙겨서 신한국 분위기에 걸맞게 우리 국민의 정서나 감정을 차분하게, 그래서 TV를 보고 애나 어른이나 유익하게 발전되도록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처장관!

본 의원은 지난 4월에 두 가지 종류의 한파를 보았습니다.

그 하나는 사정한파요 또 하나는 별로 보도되지 않은 봄 속에 찾아온 기상한파가 그것이었습니다.

지난 4월 7, 8, 9일 경에 본 의원의 출신지역인 경남 사천군 삼천포시 쪽에 갑자기 찾아온 영하의 기온으로 손쓸 새도 없이 단감 배를 비롯한 농작물에 큰 피해가 생겼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이곳저곳에 그 당시 냉해다 돌풍이다 우박이다 황사현상으로 해서 크고 작은 피해가 농어민들의 속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농어민의 애간장 타는 심정은 사정한파 뉴스에 밀려 TV나 신문에 찾아보기 힘듭니다. 행정체계상으로는 잘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뉴스 비중의 차이 때문이라고도 얘기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우루과이라운드에 적절히 대처해야 하는 이 마당에 농작물피해를 입고 있는 전국의 농어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이런 생활뉴스도 제대로 취급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보고나 보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답답해하는 제 지역주민들의 우려를 전한 것일 뿐입니다.

끝으로 돈 소리 몇 마디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표 찍어 주는 데도 돈, 교수 별 인턴 레지던트 가수 텔런트 되는 데도 돈, 사이버기자 되는 데도 돈, 결혼시키는 데도 돈, 여권 내는 데도 돈, 공사 따는 데도 돈, 준공검사 받는 데도 돈, 국민 학교 담임선생님 만나러 가는 데도 돈, 은행대출 받는 데도 돈, 빠짱꼬 영업허가 해 주는 데도 돈, 봐 주는 데도 돈, 죽어서 영안실 얻는 데도 돈, 썩지 않고 냄새 나지 않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자꾸 언제까지요 어디까지 할 것이냐에 속 태우고들 있는 것 아닙니까? 반면에 대다수들은 기대와 찬사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제 질문을 끝내면서 어느 분의 베스트셀러 책 제목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가 생각납니다. 새 정부 역시 신한국창조를 위한 개혁과 변화의 갈 길은 멀고 해야 될 일도 많은 것으로 압니다.

과거 불완전했던 체제, 미약한 정통성, 치달린 개발도정에서 벗어졌던 일들에 관해서 회개와 반성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용서하는 새 정부의 이미지도 이제 한번 생각해 볼 때라고 봅니다.

초는 자기 몸을 태우면서 빛을 발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용케 어려운 국제환경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몸으로 태우면서 때로는 머리를 굴리면서

여기까지는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 속기중단)

.....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이제 더 이상 되기 위해서는 더 무엇이 필요한지를 차분하게 생각하며 이 의사당 밖의 세상이 그리고 남북, 더 나아가 지구촌시대의 국제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살펴보는 지혜를 모아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황낙주 다음은 민주당 박계동 의원 질문이 있겠습니다.

○박계동 의원 서울 강서구 박계동 의원입니다.

저는 소위 재야운동권 출신이라 불리는 의원입니다. 그런 제가 이 의정단상의 말석을 차지하고 또 오늘 첫 대정부질문을 함에 있어 만감이 교차함을 억누를 수 없습니다.

1975년 5월 당시 박정희 정권은 유신독재에 저항하는 국민들을 가일층 탄압하기 위하여 소위 긴급조치 9호를 발동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긴급조치 9호의 내용은 유신헌법에 대한 비방금지, 5인 이상 집회금지,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사형과 무기징역도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기막힌 철권정치하에서 자유와 정의와 진리를 논하던 한 대학 4학년이던 저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 독재자에 의해 국민의 모든 권리가 빼앗겨 가는 상황에서 그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한 지식인이 굴종의 대가로 얻는 출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고민으로부터 저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정권하에서 4차례 투옥되고 일곱 차례의 구류, 28회의 가택연금, 4년 반 동안의 수배생활 그리고 인간이기를 거부당하는 모진 고문을 견뎌야 했습니다.

과격한 폭력주의자로 매도되던 제가 오히려 가장 과격한 권력의 폭력의 희생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용기와 사랑을 배웠습니다.

또한 저는 제 몸 곳곳에 박혀 있는 고통의 파편 속에서도 한 가지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민주주의와 자유! 그것은 목숨을 걸기에 충분한 사회적 가치라는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문민정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구악을 청산하고 국민을 억압해 왔던 탄압구조를 제거하고 경제적 정의와 사회적 평등을 실현해 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우리에게는 두 가지 책무가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구악을 말끔히 청산하고 개혁하는 일이며 둘째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영삼정부의 최근 몇 개월 개혁조치를 주시해 본 본 의원은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커다란 실망과 우려를 감출 수 없습니다. 우선 김영삼정부는 좀 더 겸허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사회 전반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개혁이 대통령 한 사람의 영웅적 결단만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또 그렇게 국민들을 현혹시켜서도 안 될 것입니다. 지금 김영삼 대통령이 서 있는 영광된 자리는 60년 4·19 학생혁명과 80년 광주민중항쟁 그리고 87년 6·10 시민항쟁을 통해 일관되게 민주주의를 염원하며 투쟁해 왔던 우리 국민들의 희생과 성과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청산과 개혁은 시대와 국민이 부여한 의무이지 대통령 개인의 전리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대통령을 대신하는 총리께 질문합니다.

국민들은 김영삼정부의 성격에 대해 명백히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김영삼정부가 펼치고 있는 개혁의 본질에 대한 물음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는 과거청산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청산에는 세 가지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광주문제의 해결이며 둘째는 양심수 석방과 사면 복권, 셋째는 6공비리의 청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광주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12·12 사태는 전두환·노태우 씨 등 소위 신군부 정치군인들에 의한 자행된 군사쿠데타입니까 아니면 합법적인 군사행동이었습니까?

둘째, 광주민주화운동이 일부 불순세력이 사주해서 발생한 광주시민의 폭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광주시민들의 민주항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셋째, 정부가 광주시민에게 물질적 정신적 위로를 해야 한다면 과거 군사정부의 잘못을 인정

하는 국가배상의 차원이어야 합니까 아니면 보상의 차원이어야 합니까?

광주진압과 관련해서 80년 6월 20일 훈·포장을 받은 66명의 명단과 당시 이들의 공적평가자료와 훈·포장 상신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광주진압에 직접 참여한 3공수 7공수 11공수 20사단의 대대장급 이상의 지휘관들의 현재 직업과 직급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13년 동안 광주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근본적 이유가 광주학살의 당사자들이 권력을 잡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그리고 손해배상과 명예회복의 순으로 광주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그리고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새 정부하에서 더 이상의 위증과 자료은폐가 허락되지 않는 가운데 국회청문회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양심수 석방, 수배 해제, 사면 복권과 관련해서 법무부장관께 질문합니다.

본 의원은 양심수 석방과 사면 복권 그리고 수배해제조치는 새 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새로운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회의 화해와 통합을 이루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출범하자마자 이른바 건국 이래 최대의 사면조치라는 3·6 사면조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3·6 사면조치로 석방된 사람은 전체 530명의 양심수 중 144명에 불과했고 그나마도 잔형기 1년 미만의 사람이 120명이나 되었습니다.

장관! 지난번 사면 이후 아직도 감옥에 남아 있는 양심수는 몇 명입니까? 양심수 석방과 관련 석방기준은 무엇입니까?

첫째, 같은 방북사건 관련자 중 임수경 문규현 문익환 유원호 씨는 석방되고 서경원 방양균 씨 등과 임종석 박종렬 등 전대협관련자들은 석방되지 않은 점은 무엇입니까?

둘째, 인도주의적 조치로 칭송받은 바 있는 이인모 씨의 석방 송환은 이루어지면서도 전대미문의 기록으로 43년째 구속되어 있는 세계 최장기수인 김선명 씨 등 지금까지 20년 이상 복역하고 있는 29명의 장기수는 어떤 근거로 석방되지 않았는지 밝혀 주시고 셋째, 사노맹사건의 관용의지를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백태웅

씨가 항소심에서 15년을 선고받았는데 무기수인 박노해 씨에 대해서도 최소한 감형조치가 있어야 형평의 원칙에 맞는 것은 아닌지?

넷째, 88명의 노동자 중 17명만 석방된 것과 관련 법무부는 제3자 개입이나 위장취업자는 제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최근 저희 당 이부영 의원이 제3자 개입으로 구속되었다가 지난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바 있으며 또한 제3자개입금지조항이 국제노동규약에도 위반된다고 생각하는데 차제에 근로자들에 대한 전면 석방의지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배자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수배를 당한 채 거리를 헤매고 있는 300여 수배자에 대한 구제방안은 무엇입니까? 또한 수배자 자수 시 구속기준은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시국관련자들의 징집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거 5, 6공화국 시절부터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에 악용되어 온 병역법 시행령 103조를 개정하고 개정 이전에라도 해당 시국관련 대상자들을 구제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김구, 장준하 선생 등 정치적 의문사사건 그리고 5·6공 치하에서 이대창 박창규 씨를 비롯한 의문사사건, 한준수 이문옥 윤석양 씨 등의 양심선언 폭로사건, 강기훈 씨 유서대필사건 등에 대해서도 차제에 엄밀한 재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거 반공이데올로기의 확대 재생산과 공간기관의 수사경쟁 그리고 수사관들의 포상욕 등으로 인해 법 적용의 무리나 과장 혹은 조작된, 다시 말하면 월북기도자, 남파공작원을 제외한 일체의 간첩단사건에 대해서도 재심청구를 받아들이고 관련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나 피해가 있었으면 이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삼청교육대 문제도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할 과제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에게 있어서 양심수 문제는 시혜의 차원이 아니라 부채라고 보며 김 대통령도 조속한 시일 내에 또 다른 사면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그 시기와 대상 폭 그리고 기준

에 대해서 상세히 밝혀 주십시오.

이제 정치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칫 개혁이 지금처럼 사정차원의 비리 캐기에만 몰두한다면 이는 집권 초기의 기반구축을 위한 겁주기로 끝나 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물을 제대로 짜야 고기를 잡을 수 있듯이 진실한 정치개혁은 민주적 제도화의 정착에 있습니다. 구체적 조치로서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실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선 단체장선거 실시와 관련하여 총리는 며칠 전 95년 상반기에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총리는 지난 6공화국에서 실정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대통령 마음대로 연기한 것이 위법이라 생각합니까 아니면 합법이라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만약 95년 실시가 현 정부의 공식방침이라면 이는 6공화국은 불법행위의 주범이요 현 정부는 공범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본 의원은 단체장선거의 조속한 전면실시가 국민의 합의라고 보며 지나친 줄속을 방지하고 법의 준수라는 측면에서 늦어도 94년 상반기까지 실시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를 대표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정치개혁을 하자면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정권안보용으로 악용되어 온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가의 기본적 민주질서를 수호할 수 있는 대체입법으로의 개정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안기부법 개정입니다. 안기부의 수사권과 조정권을 폐지하고 예산공개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의사는 없는지 밝혀 주십시오.

네 번째로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인사의 독자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경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총리는 이 네 가지 사안에 대해서 확실하고 당당한 답변을 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대통령 스스로의 개혁도 중요합니다.

총리께 질문합니다.

최근 월간조선 5월호 보도에 의하면 민자당 의원들 스스로 지난 14대 대통령선거 당시 중앙당 지원금이 각 지구당에 10억 원씩 배정된 바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액수만도 전국 지구당에 2370억 원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이 외에도 사조직 가동비를 생각해 보면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민자당은 아무리 줄여 잡아도 최소한 5000억 원 이상을 썼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자당이 선관위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지난 대선자금으로 284억 8000만 원을 썼다고 신고한 바 있습니다.

총리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까?

총리! 총리에게 지난번 대선 당시 여야가 사용한 비용에 대해 재실사를 착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개혁이란 자신의 손부터 깨끗이 할 때만이 도덕성을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용공음해로 당선되고 이후에 사죄하는 부도덕성도 차체에 잠시 짊고 넘어가겠습니다.

총리! 현 정부가 6공화국 비리 및 의혹사업에 대한 조사와 처벌에 소극적인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6공 말기 수많은 의혹을 불러일으켰던 경부고속전철사업, 영종도 신국제공항 건설사업, LNG 수송선 수주, 상용자동차 허가, 울곡사업 등 전직 대통령을 둘러싸고 일어났던 이 엄청난 사업들이 이제 한 점 의혹도 없이 명백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이미 동화은행사건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으며 수십만 평에 달하는 조중훈 씨의 영종도 땅도 신국제공항사업의 의혹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총리! 김 대통령은 얼마 전 부정비리 추방에 성역이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국내외 재벌과 결탁한 전직 대통령의 비리는 은폐하고 있는 것입니까?

또한 방송위원회 위원 8명이 집단사표를 제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보처장관이 종합유선방송위원회 9인 전원의 임명권을 갖는 것은 언론통제를 더욱 옥죄이기 위한 수단은 아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단일통신사제도를 폐지하고 정보채널을 다원화시킬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십시오.

현직언론인들의 정치개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며 장관은 이러한 관행이 언론의 중립성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관! 이제 더 이상 동반을 가장한 통제는 국민적 저항을 불러온다는 역사적 교훈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며 언론의 정치적 중립화를 위한 장관의 소신과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해직언론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문민시대를 맞아 국민들은 75년 80년 강제 해직된 언론인들의 원상복직을 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도 야당총재 시절 여러 차례 이 분들의 복직 당위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장관은 해직언론인 복직문제가 단순히 언론사와 해직언론인 당사자 사이의 관계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정부적 차원의 해결과제라고 보십니까?

장관은 74년 동아일보 광고사태와 75년 동아·조선 언론인 해직사태 및 80년 언론대학살의 진상을 규명하고 해직언론인 원상복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지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재산공개 시 부정축재 의원으로 몰려 이의정단상을 떠나야 했던 의원들은 이에 비하면 한낱 떡고물에도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5공 연장이라던 6공화국에서도 5공비리특위를 두었는데 하물며 문민정부를 내세우는 새 정부가 어찌서 과거 군사정권시절의 비리를 밝히는 데 소극적일 수 있단 말입니까?

전두환 씨가 노태우 씨에게 수천억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했듯이 혹시 김영삼 대통령도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엄청난 정치자금을 받고 말이 묶여 있는 것은 아닌지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즉각 6공 비리의혹을 밝히기 위해 국회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이제 사회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정책에 대하여 공보처장관에게 질문합니다.

과거 김영삼 대통령은 야당총재로서 민주화의 지도자로서 언론의 가장 큰 피해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언론은 비판과 감시역할을 통해 권력기관으로서의 국가와 국민을 통합해 내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언론은 체제와 기득권에 편승하여 가치중립적 기능을 상실한 채 더욱이 공보처는 이 과정에서 언론 길들이기와 탄압을 담당하는 기구가 돼 버렸습니다.

이제 김영삼 대통령은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언론을 이전처럼 주머니에 넣고 권력유지의 도구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국가백년대계를 생각해서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 줄 것인가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언론 스스로도 기업형 경영으로 해서 스스로 권력에 발목 잡히는 권언유착을 그만 두어야만 합니다.

공보처장관!

신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임기를 무시하고 KBS MBC 사장을 경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로 교육문제와 관련해서 교육부장관에게 질문합니다.

우선 최근 전교조 해직교사 복직문제와 관련하여 나름대로 전향적 노력을 보이고 있는 장관께 해직교사들의 원직복직을 바라는 본 의원으로서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사학재단의 전횡과 비리, 검은돈에 의한 부정입학, 교육계 관계자들에 의한 문제지 부정유출 등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다 준 교육계 전반은 분명히 개혁되어야만 합니다.

이번 교육계 비리사태와 관련, 52명의 공직자를 징계한 것으로 아는데 오히려 책임이 무거운 일반직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징계하지 아니하고 교육평가원 및 교육부 전문직 공무원만 징계했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김영삼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장관도 밝혀 왔던 교육재정 GNP 5% 수준 확보에 대한 교육부의 구체적 계획과 방법을 밝혀 주시고, 또한 마찬가지로의 공약사항으로서 교육위원회의 설치 운용을 밝힌 바 있는데 이의 진척상황과 위원회의 참석대상 주관부처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노동정책과 관련해서 노동부장관에게 질문합니다.

첫째, 노동법 개정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노동법 중에 악법적 내용이 있다는 것은 장관도 잘 알 것입니다. 복수노조 금지, 제3자개입 금지,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등의 조항은 국제노동규약에도 위배되는 후진국 법조항이라고 지적받고 있는데 차체에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개정한다면 어떤 조항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해고노동자 복직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장관은 지난 3월 10일 근로자의 날에 90년 이후 해고된 노동자 5200여 명에 대한 복직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발표한 지 두 달이 다 돼 가는 지금 몇 명의 노동자가 복직되었습니까? 해고노동자들을 전원 복직시킬 구체적 절차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벌들의 매립공사를 통한 엄청난 부동산투기와 롯데재벌의 백화점 확장투기에 따르는 부정비리는 이제 행정규제를 넘어 범정부적 차원에서 개혁과 사정의 차원에서 재조명하여 청산하거나

정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한 몇 개의 질문사항은 시간관계로 정부 측에 서면으로 보내니 의장께서는 속기록 부기를 허용해 주시고 정부 측에 오후에 직접 답변토록 허락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참 조)

국무총리!

우선 군사독재와 개발독재 야합의 상징인 천수만문제, 충남 서산의 A·B지구 매립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수자원의 보고였던 천수만, 그 연안의 1만여 세대를 우롱해 온 현대그룹의 횡포에 대하여 농림수산부와 충남도 등 정부당국은 그렇게 무능하고 왜 그리 무기력해 왔는가요!

현대와 안응모 충남지사가 1986. 5. 21 어장피해보상에 합의한 바 있었는데 당시 해태(김) 1책당 다른 지역은 75만원 내지 95만 원 선이었음에 비하여 그 3분의 1 내지 4분의 1 수준인 25만 원 선에 보상 결정한 이유와 근거가 있을 수 있는가요?

해태 이외의 어업권도 양향을 받아 황폐화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는데 합의 당시 향후 발생될 어장피해 일체를 어떻게 포기할 수 있었던 말인가요?

1991. 9. 20 농림수산부장관의 면허조건변경(보충)명령을 현대 측이 아직까지도 이행치 아니하여 연안주민들은 그 자존심 차원에서까지 분노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까?

제방 내수면 지원 주민에게 대법원 판결이 확인한 관행어업권을 보상하겠다고 공고한 게 1992. 2. 17 아닙니까?

1979. 8. 24 매립면허,

1980. 5. 23 착공 이래 3차의 공사기간 연장으로 돌아오는 6. 22 시한까지도 현대 측이 관계법과 변경된 부관을 위배하여 어길 때에는 차라리 공유수면매립법 제22조와 25조에 의거 그 이상 준공인가기간을 연장하지 마세요.

면허 자체를 취소해야 할 게 아닙니까? 그래야만 천수만 후유증을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데 정부차원의 답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일반법인 공유수면매립법이 1986. 12. 31 개정·시행과 관련, 개발이익의 국가환수의 새로운 제도를 모면하고자 재벌들이 매립면장을 서두른 부정과 비리, 거기에

같이 춤을 춰 준 당국의 조치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립준공 시 매립면허자에게 토지소유권 전부를 주게 된 그 이전의 제도는 그 자체 부정의한 것이고 법 일반원리에 반하는 것이고 민간매립사업의 투기장이었던 겁니다.

위 법 개정으로 매립공사 투자사업비의 121% (투자사업비+이윤10%+금융비11%=121%) 상당 부분을 보상토록 한 새 제도는 바로 시행되어야 할 개혁조치였습니다. 그 개혁이 입법 예고된 상태에서 86. 10. 4 현대중공업 울산시 미포동 매립, 86. 12. 8 대선조선 부산 다대동 매립, 86. 12. 24 범양건영의 제주도 탐동 매립, 86. 12. 30 한국화약의 시흥 정왕동 등 13건 매립면허 남발은 정경유착의 천문학적 비리와 특혜일진대 진상의 재조사를 통한 특혜비리를 정리할 용의가 있는지요?

정부를 대표하는 총리께 묻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선거자금을 많이 낸 2L(투엘)의 하나인 롯데그룹의 청량리 로터리지역 백화점 진출 건을 짚어 보겠습니다.

청량리 로터리에 대형건물 ‘맘모스’가 있지요. (전에는 화재사건으로 유명했던 대왕코너라 불리었지요)

5년 전에 300억대에 매수하여 소유하게 된 (주)맘모스의 송재건 대표이사가 최근 그 4배 상당인 1200여억 원에 롯데그룹에 매도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 언론에 보도된 자료가 있습니다. 매도한 법인은 양도소득세에 해당되는 특별부가세를 납부했는가요?

납부치 아니했으면 실사해서 부과해야 하지요?

한편 그것을 매수했다는 롯데그룹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입니까?

롯데그룹의 소비성향 조장의 백화점을 문어발식으로 확대를 통한 부동산투기를 우리들이 수용할 수 있는가요? 총리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비판적 여론의 화살을 피하고 공정거래와 조세납부를 우회하기 위하여 그 매매쌍방이 이해가 일치하여 이면의 밀약으로 외형상으로는 종전 보유자인 송 씨의 회사가 계속 소유를 보유하면서, 롯데가 내용적 실질적으로 경영 주체로 등장하게 된 소위 위탁경영형식 내지 매장임대차에 의한 형식을 취하고 (주)맘모스의 주식을 비밀리에 거래하는 거 아닙니까?

사정차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증권감독 내지

조세당국의 실사와 규제를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무·법무부장관에게도 묻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롯데의 진출을 위해 송재건 씨가 기존 영세점포주들을 내쫓는 과정에서 그들의 음흉하고 지지분한 음모와 이에 놀아나는 수사관계자들이 있었다지요.

1992. 7. 13 야간 명도집행 시 도시에 영세점포주인 상인들이 전과 6범 김용범이라는 집달관 노무보조자를 쇠 행거로 구타, 요치 6주의 골절상을 입혔음을 주된 이유로 상인대표 3명을 구속시키려 했었다지요?

그런데 바로 얼마 전 5. 1 오히려 김용범이 무고죄로 구속되었다지요?

청량리경찰서 채증반이 7. 13 밤의 그 현장을 촬영한 사진에 이미 김용범은 다친 모습(기브스한 채)으로 집달관 보조인부로 동원된 게 나타나 있었다지요.

그럼에도 그 관련 형사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검찰관계자들은 그동안 송재건과 김용범을 보호하고 문제의 사진을 은폐하고 거꾸로 상인들을 탄압해 왔대지요?

내무·법무장관!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거꾸로 형사처리를 해 온 수사담당자 등을 어떻게 조치하겠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
마지막으로 현재 국민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율곡사업과 정덕진 빠짱꼬사건에 대해서 총리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은 정용후 전 공군참모총장이 연행되기 하루 전인 4월 29일 저녁 정용후 전 총장의 자택을 방문하여 약 2시간 동안 차세대 전투기사업, 일명 KFP사업에 대해 직접 정 전 총장의 증언을 들었다는 사실을 밝혀 둡니다.

총리께 질문합니다.

90년 11월 F18 최종계약을 불과 두 달여 남겨 놓고 아무 건강에 이상이 없었던 정용후 전 공군참모총장이 90년 8월 24일부터 9월 20일까지 27일 동안이나 돌연 기무사 국군서울지구병원에 입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90년 9월 8일 다시 말하면 정 전 총장이 강제입원당한 사이 후임 한주석 총장이 취임하게 되었는데 어째서 관례를 깨고 전역식도 치루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F16으로 기종이 변경되고 얼마 되지 않아 F18도 비슷한 가격으로 인상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상당한 정치자금 제공을 전제로 한 인상이라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덕진 빠짱꼬사건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청와대 안기부 검찰 경찰 국회의원 등 우리나라 최고권력기관의 비호를 받으면서 우리나라 최고의 범죄집단과 빠짱꼬업자가 결탁한 국기를 흔들 만한 한국판 마피아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 장관은 신건 현 법무부차관, 이근개 대전고검장, 전재기 법무부연수원장 등이 수차례에 걸쳐 정덕진 씨와 만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장관은 신건 법무부차관과 전 서울지검장 시절 동생을 통해 정덕진 씨와 알게 된 전재기 법무부연수원장이 각각 정덕진 씨와 몇 차례에 걸쳐 언제 어디서 무슨 목적으로 만났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법무부가 매일 언론에 대해 수사에 관한 중간브리핑을 해 오다가 돌연 함구령을 내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울러 지금 세간에는 현 대통령의 영식까지 이 사건과 관련되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소상히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용팔이사건의 배후로 지목되었던 전 호국청년단 이승완 씨가 있습니다.

88올림픽 당시 노 대통령이 일본 야쿠자두목에게 표창장을 수여하여 물의를 빚은 바 있고 이때 노 대통령에게 일본 야쿠자두목을 소개한 사람이 이승완 씨로 알려져 있는데 아울러 전민련사무실 기습테러사건을 직접 지휘하였으며, 용팔이사건 당시에는 당국의 도움으로 미국에 도피할 수 있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이러한 이승완 씨가 현재는 한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이승완 씨가 수배상태인지 여부와.....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속기중단)

.....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수배상태라면 왜 검거하지 못하는지 밝혀 주십시오.

이제 어느 누구도 13년간의 이승만 민간독재와

30년 군부독재에 시달려 온 우리 국민들을 또 다시 과거로 돌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민주주의를 갈망하여 한시도 불의에 대한 저항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던 우리 국민들은 정말 위대하다 할 것입니다. 최초의 문민정부를 연 김영삼 대통령도 확고한 개혁의 신념으로 진정한 민주주의 발전의 커다란 초석이 되길 기대하면서 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낙주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박주천 의원 질문이 있겠습니다.

○박주천 의원 민주자유당 소속 마포 을구 출신 박주천 의원입니다.

국정을 함께 책임지고서 그 진지한 논의를 위해서 이 자리를 같이하신 이만섭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국회에 출석하고 계신 황인성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우리의 최우선적인 과제는 지난날 왜곡된 역사의 물질을 과감한 개혁의 길로 돌려놓음으로써 문민의 역사에 숨결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뒤따르고 제살을 깎는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사회병리를 치유하는 데 우리는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국력을 모아 선진경제를 달성하는 한편, 부의 편중을 시정하고 소외된 계층의 삶을 풍요롭게 함으로써 진정한 국민복지시대의 막을 여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새 시대의 모습입니다.

변화와 개혁의 물결 한가운데서 우리는 국정방향의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함께 고민하고 문제해결의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역사적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금부터 국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상 유례가 없이 90% 이상의 국민이 개혁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여론에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혁이 제발 일과성 단발로 끝나지 않기를 국민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정작업만이 아닌 진정한 개혁, 즉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국민적 개혁으로 승화 발전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개혁을 성원하고 있습니다.

이 개혁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하루속히 완벽하고 아름답게 성공적으로 성취되어야 하며 또

한 개혁의 결과로 얻어지는 과실은 국민 모두가 향유하는 우리 현대사의 대과업으로 이 개혁이 역사에 남기를 기대해 보면서, 총리께서는 이 개혁의 지속적인 대성공을 위해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해 갖고 계신지 또 어떠한 제도와 법체계를 구상하고 있는지 구체적이고 명쾌하게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직자의 부정과 비리는 철저히 파헤쳐져서 그 뿌리를 절단하고 환부를 도려내는 작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때에 따라서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공직자들의 무사인일과 직무태만 또한 부정과 비리 이상으로 엄히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구포 무궁화호열차 전복사고로 78명이 사망하고 제주도 추자교 붕괴로 2명 또 논산 서울신경정신과의원 화재로 34명이 사망했습니다. 최근 탈영병 총기난동사건으로 1명이 사망하는 등 이 모두가 최근 한 달여 만에 일어난 무고한 시민의 사망일지입니다. 이 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선량한 시민의 분노에 찬 시선으로 본다면 단순한 사고나 사건이라기보다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총체적 비리가 낳은 방조된 집단살인사건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이렇게 간주해 볼 수 있다면 이들 사건의 정범은 공사에 직접 관여한 업자나 그 일과 직접 관련된 관련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참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행정을 소홀히 하고 방치한 관계행정기관이 있다면 그들이야말로 이 사건의 살인방조자라는 국민의 냉혹한 질책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행정당국이 사명을 다한 진지한 지도감독을 내 집안일같이 철저히 해 주었다면 과연 이 같은 대량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을까 하는 강한 의문을 가져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끝이 보이지 않는 일부 공직자와 사회 일각의 부패구조를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척결하고 개혁의 추진을 위해서 검찰과 경찰 그리고 감사원을 포함하는 합동사정반을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또한 어떤 대책을 따로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비리를 파헤치고 부정을 단죄하는 작업이 소극적인 개혁이라면 경제성장과 국민복지의 증진을 목표로 하는 정책은 적극적인 개혁입니다. 소극적 개혁이 적극적 개혁으로 전환되려면 궁극적으

로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는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회보장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 그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해서는 국가의 발전과 통합을 가져올 수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언제까지나 잘사는 사람에게도 고통받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고통분담을 요구하며 인내하라고 할 수만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성장의 논리를 내세워서 사회복지정책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제성장에 주안을 둔 신경제5개년계획 중 사회복지 관련 내용은 132페이지 중에서 단 2페이지에 불과해서 새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무관심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사회복지 분야 투자는 최소한 현재의 경제규모와 균형이 맞아 이뤄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지금보다 대폭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회복지대책 전반에 대한 총리의 정책의지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행정규제완화조치와 관련해서 총리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행정규제완화조치 중 일부는 그 내용을 자주 반복함으로써 오히려 국민들로 하여금 혼란을 일으키게 한 적이 많았습니다. 또한 일부 조치는 부작용과 그 폐해가 심해서 행정의 방임이나 또는 행정공백 상태를 초래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라고 하겠습니까.

예컨대 보사부가 휴게음식점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전면 폐지키로 방침을 세웠다가 한 달도 채 안 돼서 영업시간과 장소를 다시 제한한 것이 라든지 의료보험 요양급여기간을 180일에서 210일로 연장했다가 단 하루 만에 그것을 백지화시킨 조치 같은 것은 조령모개식의 무책임한 행정 조치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예로 소방점검 대상건물을 대폭 감축하는 행정규제 완화조치는 정부가 화재예방을 포기한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달 우리는 논산 서울신경정신과병원에서 화재로 인해서 34명의 무고한 생명이 유명을 달리한 참사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병원은 당국으로부터 소방점검 대상 규모 이하의 건물이라는 이유로 단 한 차례의 소방점검 없이 방치되어 있다가 이렇게 대량 인명피해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선별적으로 행정조치를 취해서 완화해

야 할 것은 확실히 완화하고 오히려 강화해야 할 것은 더욱더 강화하는 ‘차별화 행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금번 행정규제 완화조치 사항 중에서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직접 실태조사를 해야 하는 행정기능이 거의 예외 없이 폐지되거나 또 유보되고 있는데 이는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행정행위가 현장이 아닌 책상 위에서만 이뤄져서는 국민이 정부로부터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또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노동부의 경우를 보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출입하고 관계서류를 조사한다는 것이 사업주가 부담을 갖는다는 이유로 금년도 정기근로감독을 전면 유보하고 있습니다. 보사부의 경우는 영업자의 영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공중위생 접객업소 정기출입검사를 전면 폐지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처가 특정폐기물배출업자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조치는 지방자치단체가 아직 전문인력을 확보하지도 못한 현상에서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지도감독권의 사실상 폐지 내지는 유보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까.

대국민접촉을 통해서 현장감 있는 민생문제 파악과 정책수립 및 정책집행을 해야 될 정부가 그 고유의 권한과 기능을 포기함으로써 예방적 차원에서의 행정기능을 마비시키고 또한 공직자의 무사안일을 부채질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총리께서는 차체에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감 넘치는 건전한 행정행위와 일하는 공직자상을 정착시킨다는 의미에서도 일부 규제완화조치를 수정하고 보완할 의지가 있으신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께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구속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형사소송법상 구속요건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수사담당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능히 가능케 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해도 수사의 편의를 위해서 수사기관에 의한 구속이 얼마든지 남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의 시정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더욱이 82년부터 91년까지 10년간 총 3355건의

구속영장집행사건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즉 절차상으로는 우선 합법적이라고 구속을 해 놓고 나서는 실제로는 수천 명의 구속자가 무혐의 처리됨으로써 연간 평균 300건 이상의 부당한 구속행위가 국가기관에 의해 행해지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1954년 제정된 우리의 형사소송법은 여섯 차례에 걸쳐서 개정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제 생각으로는 그 옛날 일본 형사소송법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차제에 구속사유와 구속절차조항의 대폭적인 개정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지난해 법무부로부터 제시된 형사소송법 개정시안을 보면 구인할 수 있는 허용시간을 24시간에서 48시간으로 2배나 연장하고 1차에 한해 연장이 가능한 피의자의 구속기간을 2차까지 연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심급별로 3차까지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종전보다 더욱 더 속박당하는 사실상 비민주적인 내용을 이 개정시안에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형사절차에서 적정절차를 보장하여 형사피고인과 피의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해야 할 법무부가 반대로 법원과 검찰의 심리와 수사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의도된 행정부 이기주의의 발상이라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10년간 구속영장 기각률을 보면 검사가 청구했을 때는 3% 이내인 반면에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기각률은 20%대에 달해서 특히 사법경찰관의 구속영장신청이 심히 남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구속영장 처리결과 무혐의로 불기소된 사건 중에서 99%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발부사건이라는 점에서 사법경찰관의 영장신청은 앞으로 더욱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구속은 비록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앞서 소중한 인간의 인신보호와 사회의 건강성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도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형사제도의 민주적인 운영으로 국민 화합과 통합을 이룰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수사의 편의를 위해 남발되고 있는 구속의 폐해를 막

기 위해서 인신보호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인신보호법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으면 합니다. 첫째로는 한 검사가 한두 시간 만에 50여 건의 영장심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검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개선해 줌으로써 신중하고 실질적인 영장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장전담검사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둘째는 사실상 관행적으로 배제되어 온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를 수사관의 자의적 행태로부터 보호하는 변호인 조력권을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는 구속적부심이 있다고는 하나 이는 구속 후의 심사이고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불합리를 보완하기 위해서 모든 피의자가 체포 후 지체 없이 판사 앞에 나가 구금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는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가 시급히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보석제도의 보석허가 요건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또한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형사소송제도상의 개선방안과 인신보호법의 도입과 관련해서 장관의 심도 있고 책임 있는 견해를 이 자리에서 솔직히 밝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환경처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무릇 환경정책의 기본방향은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토양오염을 방지하는 것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을 방지해야 될 환경처가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종이나 염색시설 같은 오염시설이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오히려 환경오염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기환경의 경우 세계보건기구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서울시는 대기오염도 세계 2위라는 불명예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황산가스와의 오염도가 아주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처는 서울시의 아황산가스 농도를 0.043ppm이라고 발표하면서 소위 국내환경기준치라고 정한 0.05ppm보다는 낮은 수치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국제환경기준치는 0.015에서 0.023ppm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준해 보면 서울시의 대기오염도가 국제

환경기준을 2, 3배나 초과했는데도 91년판 환경백서에는 단지 국내환경만을 기준해서 오염이 크게 돼 있지 않다라는 뜻이 발표하는 안일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기오염도를 포함한 환경기준치가 반드시 국제적 기준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반국민에게 극심한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심각하게 심어 주어서 환경오염에 대비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황산성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환경처는 조성 당시부터 주민의 큰 반발에 부딪쳐서 난항을 겪었던 김포쓰레기매립지의 경우 환경처와 주민의 공동의뢰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서 그 결과에 승복하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를 해 본 결과 지층 불안정 등으로 해서 입지가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반다지기나 물막이차단벽 설치 같은 보완작업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는 이유를 들어서 해결의 방도를 찾기보다는 행정력으로 이를 강행하는 구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피해당사자인 주민들을 문제 해결의 대등한 주체로 보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의 어려움만을 내세워서 일단 강행하고 보자는 환경처의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 빚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처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폐기물을 반입해야 할 김포매립지를 제2의 난지도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발상이 일대 전환을 꾀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과의 성실한 협의를 통해서 매립지의 시설을 보장한다든지 또는 그렇지 않으면 일단 당장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의 처리를 위해서는 적절한 대체장소를 시급히 물색해서 일정기간 매립하는 방안과 같은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장관은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정의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사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지난달 논산 서울신경정신과의원 화재로 인한 34명의 집단사망사건은 전대미문의 의료참사였습니다. 이 사건은 그야말로 단순히 화재로 발생한 참극이 아니라 앞에도 언급을 했지만 행정당국의 무관심과 무사안일이 빚은 집단살인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당시 본 의원의 생각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서 직접 조사한 결과 그 병원은 개인정신병동의 최대 허가요건인 19명도 사실은 수용할 수 없는 초간이시설로 10여 명 정도의 침상밖에 놓을 수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더욱이 이번 사고는 그 좁은 공간에다가 42명이나 되는 환자가 수용되어 있는 상태에서 야간의 정신병자 관리를 간질과 정신병력을 가진 단 한 사람한테 맡김으로써 결국은 정신병자 1명이 정신병환자 42명을 관리해 온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예견된 참사였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보사부가 사고병원을 포함해서 정신병 관련 모든 시설에 대한 실사를 단 한번도 하지 않은 무책임한 탁상행정을 펴 왔는데 있다고 봅니다.

또 기가 막힌 것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초간이시설인 정신병동의 준공검사가 본 의원의 눈으로도 엄연히 탈법이라고 확신되는 등 해당 행정관계자 등 실책들이 명약관화하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단 1명의 행정책임자도 문책되거나 또는 처벌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평소 정신병환자 문제를 가볍고 우습게 여기는 인권유린의 사회풍조가 행정기관의 의식구조에도 그대로 반영된 결과이고 책임질 줄 모르는 행정기관의 구태가 여전하다는 또 하나의 실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정부에서 제안해 놓고 있는 정신보건법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현재 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신질환 관련 시설을 오히려 합법화시켜 주는 방안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는 첫째로 전문의료시설의 확충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둘째로 전체 95만 명 가운데 입원치료가 요구되는 11만여 명의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전문의가 단 825명에 불과한 사실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에 필요한 전문의가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현재의 민간요양원의 공영화가 이뤄져야 되고 끝으로 요양원에서도 전문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수용만이 아닌 치료행위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정신질환 관련 시설 및 인원에 대해서는 정부의 애정과 의지가 담긴 특수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장관은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정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차관께서는 장관이 오후에 오시면 말씀을 정확히 드려서 오후에는 장관의 답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교육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육성의 목표는 지식의 습득뿐만 아니라 자기만의 개성과 세계를 보는 폭넓은 시야를 개발해서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함께 사는 지혜를 터득하도록 하는 데 궁극적의 목적지향점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의 교육현실은 어떻습니까? 92년 현재 900만 명을 넘어선 초·중·고등학생 중 제적이나 중퇴 및 휴학자가 8만여 명이나 돼서 청소년비행의 절반 이상을 이들이 차지하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 온 지는 이미 오래입니다. 또한 고등학교 미진학자가 1만 명에 이르고 인문·실업계 고교졸업자 중에서 진학이나 취업 또는 군 입대를 하지 않은 21만 명은 아무런 대책 없이 설 자리를 찾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들은 탈선한 동년배들의 금품갈취나 폭행에 시달리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술에 눈먼 상인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학교 주변에 차려 놓은 전자오락실이나 불량만화가게, 외설잡지, 음란비디오 같은 유혹에 연약한 감수성이 여지없이 상처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체 살인사건의 53%, 절도사건의 48.5%가 청소년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고, 서울 시내 중고생 20%가 본드나 부탄가스 같은 환각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라는 충격적인 통계를 접하게 되면 끝 갈 곳 없이 치달고 있는 우리의 청소년문제가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참서글퍼지기까지 합니다.

더욱이 입시부정으로 온 나라를 벌집처럼 들쭉서 놓은 교육관계자들의 비리백태로 이제는 교육을 통한 청소년육성의 기대감마저 무너져 가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의 교육은 진정으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에 일어난 이와 같은 일련의 시련들은 오히려 교육제도 및 정책의 총체적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일깨워 준 계기로 우리가 받아들여져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 주어야 하는 우리의 미래이지 규제와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이 또

한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청소년문제는 사안에 따라 각각 담당하는 소관 부처가 있지만 그러나 성숙된 한 인간으로서의 성장을 돕는 교육의 대계를 책임지는 교육부가 바로 이를 주관하고 다뤄야 합니다. 청소년문제를 문화체육부가 주관이 되어서 소관별로 정부 부처가 분산해서 담당하는 것은 일관된 정책수행을 위해서도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학교교육을 당연히 교육부에서 다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앞서 언급한 대로 너무 어린 나이에 자기정체를 맞은 수습만에 이르는 이 청소년들을 사회의 건강한 일꾼으로 되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종합대책 역시 교육부의 몫이 돼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장관께서는 본 의원의 이상과 같은 문제제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기 중 의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타 부처와 심도 있게 협의해서 청소년 유해환경을 근절하고 비행청소년의 선도 및 재활이나 불우청소년의 자립능력 함양을 지원하는 내용을 듬뿍 담은 청소년종합대책을 완성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원론에 그치지 않는 실천지향적인 장관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황인성 국무총리와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과거 국회가 행정부의 거수기 노릇이나 했다고 하던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난날처럼 여당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행정부를 무비판적으로 옹호하고 야당의 질책으로부터 무조건 비호만 해 주던 그런 시대를 지나갔습니다.

본 의원은 같은 배에 타고 함께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인 민자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행정부의 잘잘못을 철저하게 파헤치고 규명하는 데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 온 힘을 쏟을 것입니다. 이젠 집권여당일수록 행정부의 잘못을 신랄하게 지적함으로써 반드시 책임정치가 이뤄지도록 하고 행정부는 이를 투철한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과감하게 받아들여서 분명하게 시정할 때 진정 국민을 위하는 정치와 모두의 박수를 받는 정책집행이 이뤄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같은 길을 가고 같이 책임지는 국정의 책임자들 간의 의무와 권리이고 또 서로 간의 신뢰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혼자 가는 길은 가까워도 멀고 험하지만 함께

가는 길은 멀고 험해도 가깝습니다. 중단 없는 개혁의 길에는 대통령과 국민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여와 야도 따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 개혁이 아름답게 성공할 수 있도록 위대한 국민으로의 대장정에 모두가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끝으로 평소 존경하는 민주당 동료 의원의 조금 전 발언에 대한 한 가지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자 합니다.

어떠한 근거에서 대통령의 영식을 거론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허무맹랑한 유언비어로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이 같은 구태의연한 행위는 이제 청산해야 할 것입니다.

(장내 소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단순한 소문이나 풍문을 여과 없이 그대로 발설하고 더욱이 악의적인 언사를 소문이라는 편리한 이름을 빌려 함부로 구사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국회의 권위와 품위를 저해하는 것일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모두가 자중자애하면서 국회의 원으로서의 권위와 명예를 스스로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내 소란)

○부의장 황낙주 조용히 해 주십시오.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장내 소란)

의장의 허락을 받은 의원이 원내에서는 발언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 막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후회의는 오후 2시 반에 속개를 해서 정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이만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 국무위원 인사

○의장 이만섭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에 새로 임명된 송정숙 보사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부장관 송정숙 보사부장관 송정숙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어버이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저희 부가 주관하는 행사 중 1년 중 제일 어려운 어른들을 모시는 날이어서 그 자리를 빠질 수가 없어서 못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들이 도와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대로 열심히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계속)

(14시36분)

○의장 이만섭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인성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사회·문화분야에 대해서 김종하 의원, 이협 의원, 김기도 의원, 박계동 의원, 박주천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들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하 의원께서 주신 질문 첫 번째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서 공직자 의식개혁과 함께 관련법규의 재정비와 제도관행 개선에 대해서 정부입장을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께서 적절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직자의 의식개혁과 함께 제도와 관행의 개선이 또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정지표인 깨끗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직윤리의 확립과 부정비리 척결 그리고 이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의 개선이 다 함께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부는 각종 제도와 관행을 일체 정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행정쇄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종합적인 개선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금의 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국가기강확립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공직사회와 사회 전반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국정개혁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우선 공직사회에 대한 사정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면서 공직부조리를 근본적으로 발본색원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의식개혁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계층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과소비라든지 사치풍조를 근절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

치 그리고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는 데 필요한 법령도 아울러서 재정비하고 사회기강 확립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취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규제완화조치도 이를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정부에서도 여기에 특별히 유념해서 일방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오히려 필요한 부분은 더 진지하게 이것을 정비하는 것이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침해하는 범죄와 각종 비리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특별단속기간을 설정을 해서 집중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께서 주신 또 하나의 질문은 민간주도의 의식개혁운동을 적극 권장 추진할 의사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향하는 신한국창조의 이념구현을 위해서 문민시대의 정신에 부응하는 새로운 국민정신운동 전개가 필요하다는 데 정부 역시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국민운동이 정부주도로 추진되어 그 필요성이나 목표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추진방법에 대해서는 다소 거부감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서 신한국창조를 위한 국민의식개혁운동은 과거와 같이 정부가 추진하기보다는 여러 사회단체와 문화계 종교계 등 민간 쪽에서 자발적으로 이를 참여해 주시고 또한 선도해 주시도록 이렇게 정부에서도 기대를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데 주력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 공직사회부터 솔선수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개혁추진에 대한 국민의 높은 지지도를 볼 때 변화와 개혁의 물결은 자연스럽게 국민 모두가 동참하는 범국민의식개혁운동으로 발전될 것을 기대하면서 또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도록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다해 나가하고자 합니다.

다음 질문은 이협 의원 그리고 박계동 의원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이협 의원께서 또는 박계동 의원께서도 거의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은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주문제에 관해서는 지난 3일 정치분야 답변 시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정부

의 기본입장은 현재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또 피해자나 광주시민들에게 납득이 가고 일반 국민들도 공감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명확한 진상규명이라든지 책임자처벌에 대하여는 정부차원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광주문제 치유를 위해서 과거 민화위를 구성해서 여론을 수렴했다든지 국회의 광주특위청문회를 개최하고 또한 그 결과로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정 등을 통해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그리고 피해보상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정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나가하고자 합니다.

김종하 의원께서 주신 다음 질문은 거창양민학살사건 그리고 4·3 제주사건 등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들에 대한 재평가작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정부의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주 4·3 사건이나 거창사건 등은 모두 지난 시대에 일었던 불행하고 또 가슴 아픈 일이고 더욱이 양민의 희생을 생각할 때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민주한국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거의 불행한 사건들에 대해서 재평가작업이 필요하다는 김종하 의원의 견해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국회나 또는 공인된 사회단체에서 진상규명이나 재평가작업을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협조를 해 나가하고자 합니다.

다음 질문은 민생안전 청소년문제 그리고 노사문제의 실태와 대책에 대해서 다양한 내용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신한국창조를 위한 변화와 개혁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전반의 기강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인식 밑에서 정부는 불법과 무질서를 추방하는 데 우선 충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규제완화를 틈타서 어린이를 상대로 하

는 범죄, 청소년문제 등 일부 사회불안을 야기시키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검찰 경찰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생활을 침해하는 조직폭력, 살인, 강도, 지하철범죄 등 중요 범죄들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달인 이 5월을 맞이해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해치는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 불량만화 불법출판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아울러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으로 이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노사문제의 실태와 대책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까마는 유사한 질문을 관계부처 장관께 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노동부장관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중하 의원께서 주신 다음 질문은 노인복지시책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까마는 이 문제 역시 주무장관인 보사부장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질문은 국제환경협약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 그리고 환경산업 기술이전 문제는 어느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련 기능조정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또한 물어 주셨습니다.

정부는 작년 6월 뉴UN환경개발회의 이후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구환경관계장관대책회의를 설치하고 산업 환경 대외협상 분야에 관한 범정부적 종합대책을 수립을 해서 현재 하나 하나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역시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처장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련 기능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에서는 여러 부처에 분산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환경보전위원회를 설치해서 총리실이 중심이 되어서 종합조정 또는 기능을 수행해 나가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협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주신 질문이 정덕진사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되

고 있다는 그러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수사가 현재 진행되는 동안에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수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아직은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보고문제는 제 자신도 알고 있듯이 사회적으로 물의가 큰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일반적인 성격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사한 질문을 주신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소상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협 의원께서 두 번째 질문으로 총리가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총리로서 그 책무를 과연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미력합니다마는 헌법에서 주어진 국무총리로서의 책무를 소신을 가지고 완수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적인 과제인 개혁을 실천하는 데에는 정부는 정부대로 또는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그리고 각 사회 각 분야에 모든 국민들이 이 개혁에는 다 같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협 의원 말씀대로 앞으로 정부의 개혁의지와 개혁내용을 그때그때 소상하게 국민들 앞에 밝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협 의원께서 주신 다음 질문은 6공청문회 개최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치분야과 경제분야 질문 시에도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또한 결정을 해 주셨으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로서는 지난 시절의 모든 의혹과 비리에 대해서 현재 현행법에 의해서 성역 없는 그러한 사정활동을 전개 중에 있으므로 특별히 6공관련 청문회를 따로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전두환 노태우 두 분 전직대통령과 언론사 고위간부, 성직자, 주요 재벌 등도 재산공개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냐고 물으셨습니다.

지난번에 정부 측에서는 차관급 이상 공직자 그리고 국회에서 의원님들의 재산공개가 있었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이는 깨끗한 우리의 공직자사회의 구현을 위해서 윗물맑기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

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이 되면은 그 법에 따라서 재산공개 대상 범위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믿습니다.

현재까지는 이협 의원께서 제기하신 전직 대통령, 언론사 간부, 성직자, 경제인 등의 재산공개를 정부가 법률적인 근거 없이 추진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협 의원께서 주신 다음 질문은 인사와 선거는 국가의 틀이라고 하시고 매관매직이나 금권 타락선거는 철저히 사정을 해야 한다며 그 방안을 또한 물으셨습니다.

공직인사와 각종 선거가 그 무엇보다도 깨끗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 역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직자의 인사가 금전 또는 정실에 치우쳐서 국가의 기강을 해친다고 하면 그야말로 나라의 장래를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각종 선거의 기회가 많아지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선거는 어떠한 종류의 선거이든 깨끗하고 공명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직사회의 각종 부조리를 개혁차원에서 엄단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인사와 관련된 비리나 부조리는 사정체계를 한층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등 국가적 선거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선거를 비롯해서 각종 조합장선거에 이르기까지 모든 선거가 깨끗하고 질서 있게 치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종 선거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와 유권자들도 타락 금권선거를 배척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금융실명제의 실시시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경제정의 실현 그리고 공평과세는 물론 깨끗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금융실명제는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다만 그 시기와 방법은 지난번 답변에서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교통순경 교사 등 일선공직자의 부조리 추방과 전별금 등 고쳐야 할 관행의 개선

그리고 지방일선행정의 쇄신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 또한 지지를 해 주셨습니다.

정부는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일소하기 위하여는 우선 고위공직자와 사회지도층으로부터 윗물맑기운동을 전개하고 이를 일선기관과 전 공직자사회로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선 공무원 사회와 지방행정에 있어서의 그릇된 관행은 깨끗한 정부를 지향하는 오늘에 있어서는 더욱이 일체 근절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지방행정기관을 지도 감독하는 데 있어서 더욱이 노력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정부투자기관 이사장제를 유지하고 관변단체 예산지원을 계속 증액하는 이유, 그리고 대통령취임식 비용 등을 물으시면서 고통분담 취지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이 정부투자기관 이사장제도는 투자기관의 경영효율 제고와 책임경영 확보를 위해서 설치 근본취지에 맞추어서 이번에 그 제도를 개선을 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과거에 지급하던 이사장들에 대한 판공비라든지 사무실 승용차 일체를 제공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폐지를 하고 무보수 이사장으로 그 기능만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지원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도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대폭 절약하고 감액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4대 대통령취임식에 소요된 중앙과 지방의 총비용은 10억 2000만 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정부는 14대 대통령취임식 당일을 공휴일로 하지 않고 또한 경축사절도 초청하지 않는 등 나름대로 검소하면서도 품위 있게 이 국가적인 행사를 치르는 데 유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모든 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예산절약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 의원께서 주신 다음 질문은 청소년유해문화의 정화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는 인식

아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또한 청소년을 올바르게 육성하기 위한 조장적인 정책과 아울러서 유해환경을 정화하는 규제활동 등을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조정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청소년들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유해환경이 곳곳에 산재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도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 발달을 저해하는 불법음란출판물 등을 퇴치하고 학교 주변의 유흥업소 등 각종 유해업소를 정비하기 위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5월 한 달 동안 집중적인 단속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뜻있는 각계각층의 사회단체를 비롯한 국민의 자율참여 분위기를 적극 조성해서 그와 같은 사회적인 분위기도 더욱이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협 의원께서 주신 마지막 질문은 지역차별 지역감정을 청산할 구체적인 정책과 인사의 형평성, 지역개발의 형평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감정 청산문제는 대단히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될 중대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3일 정치분야 답변 시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새 정부는 오랜 세월 동안 누적되어 온 이 지역감정 문제 이것은 김영삼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중에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인식을 하고 지난 시대의 모든 갈등을 정부가 앞장서서 메워 나갈 방침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모든 인사정책에 균형을 이루어 나갈 것이며 또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중앙재정의 정책적인 배분과 함께 복지재정 확대, 소득배분의 개선 등을 통해서 지역감정을 근원적으로 해소시켜 나가는 데 정책의 기초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정부는 인사문제는 제도보다도 운용자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그러한 인식 아래 인사의 형평성이 보장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도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첫 국무총리로 취임한 70여 일 동안 대통령에게 '이런 것이 어떻습니까?' '그것이 아닙니까?'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느냐,

있다면 어떤 경우에 어떤 말씀을 드렸는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새 정부에서 첫 총리에 취임한 70여 일 동안 대통령을 보필을 하고 내각을 통괄하는 국무총리의 역할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매일같이 자신의 할 바를 다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자성의 마음으로 대통령을 보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는 매주 한 번씩 공식적인 주례보고를 통해서 내각이 추진하고 있는 국정 전반에 대한 정책을 보고하는 동시에 또한 당면하고 있는 주요한 과제들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또 솔직한 국무총리로서의 소견을 말씀드리고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건의를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부산열차사고 원인과 안전대책에 관해서 여러 가지 염려를 하시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많은 희생자를 내고 또한 사회에 큰 걱정을 끼친 데 대해서 그 유가족 또는 부상자는 물론 국민 여러분에게도 많은 심려를 끼쳐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열차사고는 그 원인은 규명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한전의 지중선 전력구를 굴착공사 과정에서 발파작업으로 인한 지반함몰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해서 철도뿐만 아니라 모든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철저한 안전점검, 사고원인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제, 처벌, 그리고 건설하도급에서 오는 부조리 등을 근절하는 문제, 정부 공사계약의 행정쇄신, 사고관리체제 구축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사고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는 바입니다.

김 의원께서 주신 다음 질문은 개혁정책을 추진하는 국가 진운의 이 기회에 국회와 정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새 정부는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이 땅에 뿌리 깊게 퍼진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경제를 되살리며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하는 그러한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 역사가 요구하는 국가적 민족적 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적 목표달성을 위한 개혁정책의 추진에는 국회와 정부, 여와 야가 따로 없고 국민 모두 동참과 기능분담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수레의 두 바퀴처럼 각기의

주어진 역할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긴밀하고 조화 있게 협조해 나가도록 정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 의원께서 주신 질문은 교통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시고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교통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5월 중에는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특히 대도시 교통난 해결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역시 지하철 건설입니다마는 이는 장기적인 사업으로서 6대 도시에 2001년까지 558km를 추가 건설할 계획으로 그 재원조달과 건설계획을 아울러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의 효율은 높이고 교통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당면대책으로는 버스전용차선제를 확대하는 문제, 직행버스 및 도심순환버스제의 도입, 그리고 택시제도 개선 등 대중교통수단에 우선을 두도록 하고 일방통행제라든지 이면도로 정비, 불법주차 근절 그리고 도로소통 효율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아울러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가용 승용차의 이용을 줄이기 위한 차고지증명제, 승용차 함께타기운동, 지하철 역세권 주차장의 대대적인 확충을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국공유지의 주차장 활용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한 이것을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께서 질문하신 또 하나의 내용은 신한국 정서에 맞는 공직자상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새 정부는 부정부패 척결과 국가기강 확립, 그리고 경제회생을 최대의 당면 현안으로 인식하고 출범한 문민정부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공직자상으로는 국민의 편에 서서 산적한 국가적 현안을 타개하면서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망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새 정부에 몸담고 있는 모든 공직자들은 우선 깨끗한 공직자로서 그리고 변화와 개혁을 주도해 나갈 소신과 능력을 갖춘 공직자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스스로를 헌

신하고 봉사하는 공직자로서 새로이 공직자윤리를 확립하도록, 그래서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새로 태어난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모든 공직자가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앞에 서도록 공직자의 의식개혁, 기강확립, 자질향상 등을 위해서 계속 교육훈련 등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김기도 의원께서 주신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 이 빠짱꼬 영업비리 문제와 관련해서 그 개선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빠짱꼬영업소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된 데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빠짱꼬업소에 대한 법적인 규제와 함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왔습니다마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 실태를 다시 면밀하게 파악하고 분석을 해서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계동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역시 광주문제와 관련을 해서 12·12 사태와 광주민주화운동의 성격 그리고 광주시민에 대한 정부의 물질적 위로문제 그리고 훈·포장 관련 사항과 진압부대 지휘관의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2·12 사태에 대해서는 6공화국 시절 이에 대한 청문회를 통해서 다각적으로 평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민주화운동은 광주사태로 불리워지던 것을 광주시민의 민주화운동 성격을 부각시키기 위해 다시 명명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촉구해 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광주시민에 대한 정부 위로문제에 대해서는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하기 위해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한 보상조치가 그동안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진압과 관련한 훈·포장 수상자명단 등과 당시 진압부대 지휘관의 현재의 직업 등에 관한 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추후에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주무부처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동 의원께서 주신 다음 질문은 자치단체장 선거 실시 유보로 인한 법 위반상태의 지속문제와 단체장선거의 94년 상반기 실시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법에 정한 대로 지방자치단체장선거가 실시되지 못한 데 대해서는 그 경위가 어떻든 정부로서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법을 존중하고 법대로 집행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 책무라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경제사회의 안정, 국가의 이익과 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 현실적인 여건에 부응해서 이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 또한 정부의 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기는 합니다. 각종 선거의 과다 연속 그리고 집중되는 이런 현상을 피하면서 완벽한 자치기반 조성을 위하여는 95년에 지방의회의원과 단체장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도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이러한 모든 문제를 충분히 논의를 해 주시고 심의 결정해 주시면 정부로서는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으로 개정할 용의와 안기부법 개정에 대한 견해를 또한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분야 질문 시에 답변드린 바도 있습니다. 현재 정부로서는 현행의 국가보안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더욱이 향후 북한의 태도와 안보여건에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기부도 문민정부 출범에 따라 많은 개편을 했습니다. 안기부 운영을 지켜보면서 안기부법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박 의원께서 주신 다음 질문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인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경찰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경찰이 외부영향을 받지 않고 업무수행에 중립

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데 이론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찰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함께 고려를 해서 91년 독립된 경찰위원회와 경찰청을 발족시켜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발견되면 이를 적당한 시기에 가서 관계기관과 모두 협의를 해서 다시 보완할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 의원께서 주신 질문은 지난 대선과 관련하여 민자당의 선거비용을 말씀하시고 여야가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 실사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지난 12월에 있었던 대통령선거는 부분적인 문제점들이 없지 않았습시다. 전제적으로는 과거 어느 대선 때보다도 질서 있고 공정하게 치러진 선거라는 그러한 평가를 국내외적으로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각 정당이 사용한 선거비용은 이미 각 정당이 관련규정에 따라서 선관위에 신고를 하고 선관위에서도 이 문제를 일단락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각 정당이 사용한 선거비용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새로이 실사에 착수할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의원께서 주신 다음 질문은 현 정부가 6공화국 부정 비리 및 의혹사업에 대한 조사에 소극적인 이유,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는지를 물으시고 또한 6공비리와 관련된 국회청문회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다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번 답변드렸습시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는 과거의 부정비리문제를 개혁의 큰 과제로 인식을 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적극적으로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6공비리에 관한 국회청문회 개최문제에 대해 정부는 그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으나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또한 국회에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계동 의원께서 주신 다음 질문은 차세대 전투기사업 기종변경계약을 앞두고 정용후 전 공군참모총장을 전역시킨 이유와 기종변경에 따른 의혹 등에 관해서 또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의 전력증강사업은 그 특성상 일반에게 공

개가 제한되어 왔으므로 의문이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바와 같이 정용후 전 공군참모총장은 당시 공군의 인사비리에 관련이 되어서 전역하게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그 직위가 공군참모총장이기 때문에 공군장병들과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그 당시 자진 용퇴하는 방안을 택하게 된 것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상의 이유로 해서 입원 중에 있기 때문에 이·취임식에는 불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세대전투기사업 기종변경을 포함한 전력증강사업에 대한 의혹에 관하여는 현재 감사원에서 전면적인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원 감사결과가 마무리를 짓고 그 비리가 발견되면 정부는 이를 엄정히 처리하고 또한 제도상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과감히 개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참 조)

서산지구 간척사업 추진에 따른 농민피해보상 대책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산지구(천수만 A·B지구) 간척사업은 우량농지의 확보를 통한 농업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민간참여에 의한 대규모 간척농지개발사업 시행규정을 제정, 동 지구의 사업을 79. 8. 24일자로 현대건설(주)에 매립면허하였으며 현대건설에서는 80. 5. 23일자로 공사를 착공, 93. 5. 8 현재 95% 정도의 공사가 진척되고 있습니다.

동 지구의 어업권보상문제는 86. 5. 21일자로 피해농민들의 위임을 받은 충청남도지사와 사업시행자인 현대건설이 합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 어민들이 어장이 황폐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상 당시는 충분한 보상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국회에 청원을 제출하였으며 정부에서는 국회청원심사결과에 따라 91. 9. 20일자로 면허조건을 변경, 어민피해보상문제를 해결하도록 명령하였으나 현대건설(주)이 정부의 면허조건변경처분이 위법 부당하다 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현재 계류 중입니다.

정부로서는 동 소송에 적극 대응, 어민의 보상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공유수면매립법 개정안이 입법예고(86. 8. 2)된

상태에서 현대중공업 등 13건에 대한 매립면허를 남발한 것은 특혜이므로 이를 재조사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종전에는 매립사업 준공 후 매립자가 공공시설 용지를 제외한 전 매립지를 취득토록 되어 있어 부동산투기의 한 요인이 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정부에서는 86. 12. 31 매립사업비의 121% 상당토지만을 취득토록 동 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박 의원께서는 입법예고(86. 8. 2) 이후 매립면허된 13건에 대해 특혜와 면허 남발이 아닌가 하고 물으셨는데 82~86 5개년 간 평균 면허건수는 연 35건이며 86년에도 34건이 면허되었음을 볼 때 입법예고 이후 5개월간 13건의 면허가 된 것은 남발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동 사업자들은 입법예고 이전에 면허가 신청되어 관계기관 협의를 거치고 환경영향평가 실시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는 등 적법하게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서 특혜로 볼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롯데그룹 청량리지역 백화점진출 건에 관하여, 우선 매도법인 (주)맘모스가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 특별부가세를 납부했는지 여부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해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질문과 동 그룹의 문어발식 백화점 확장을 통한 부동산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시면서 위탁경영형식 내지 매장임대차에 의한 형식을 취하고 주식을 비밀리에 거래하는 데 대하여 사정차원에서 실사와 규제를 하여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법인의 특별부가세는 법인이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처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주)맘모스의 9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92. 6)에는 특별부가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만일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소정의 절차에 의거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그룹의 백화점 경영의 확대는 당해기업의 사업방침에 관한 것으로서 부동산투기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롯데그룹이 (주)맘모스와 이면거래를 통하여 소유권을 인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계부처로 하여금 진상을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적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주민피해보상과 이주대책의 계획과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김포공항 주변 항공기 소음피해대책을 위하여는 91. 12월에 항공법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금년 하반기부터 방음시설 설치와 소음극심지역 주민의 이주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96년까지 완료하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계부처로 하여금 소요예산 확보나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박주천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개혁의 성공을 위해 어떤 프로그램과 제도 및 법적 체계를 구상하고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지난번 정치분야 질문 시에도 이와 같은 내용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시다라는 박주천 의원의 말씀대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새 정부의 개혁조치가 일과성이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는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정부로서는 모든 국민의 지지와 동참 속에서 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여러 분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규제와 통제를 풀면서 사회의 관행과 의식을 고쳐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법과 제도에 의한 사회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이러한 개혁의 흐름은 단계적이며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현재 청와대, 그다음에 정치권, 정부 각 부처를 중심으로 장·단기적인 개혁과제와 단계적 추진계획이 보장되고 또한 협조를 얻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새 정부의 개혁정책은 우선순위의 완급을 가려서 앞으로 5년간 중단이나 퇴색됨이 없이 지속적으로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박주천 의원께서 다음 주신 질문은 부패구조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척결을 위해 검찰 경찰과 감사원으로 구성된 합동사정반의 설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현재 감사원 검찰 경찰 등 각 사정기관에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부정부패의 척결을 위해서 각자의 주어진 역할과 기능에 따라서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사정기관 간에 필요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되 각기 주어진 기능에 따라서 독립적이며 자율적으로 업

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섭 의장, 황낙주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 박 의원께서 주신 질문은 신경제5개년계획에 사회복지 분야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시고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박주천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회복지정책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의견을 같이하는 바입니다. 특히 경제의 성장과 발전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복지증진에 있다고 봅니다. 정부 사회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을 증대시켜 생활의 질을 높이는 한편, 기본수요의 충족과 사회보장제도의 내실화를 통해서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의료보험, 최저임금제 등 사회복지제도의 기본 틀은 일단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제부터는 그 바탕 위에서 내실화를 기하는 데 중점을 두어 가겠습니다. 특히 의료보험은 적용범위를 계속 넓혀 나가고 또한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제도는 96년 농어민연금 확대실시를 목표로 현재 여러 가지 준비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고용안정을 위한 고용보험제 실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는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5만 호씩 건설을 하고 직업훈련, 생업자금융자 등 자활자립을 위한 지원시책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주천 의원께서 주신 마지막 질문은 행정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추진 중인 일부 규제완화조치를 수정 보완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물음이었습시다.

정부는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회복하고 행정의 민주화, 능률화를 구현하기 위해서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기업활동을 저해하고 국민생활에 부담과 불편을 주는 여러 가지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는 노력을 지금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규제 완화조치 과정에서 정부로서는 규제완화 효과와 규제완화로 발생할지도 모를 부작용 등 양면을 교량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박주천 의원께서 지적하신 행정상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에 유념해서 사후점검 그리고 보완조치

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낙주** 다음은 내무부장관 답변 있겠습니까.

○**내무부장관 이해구**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대학입시부정과 관련하여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째로 경원대 입시부정사건과 관련하여 계속 수사키로 한 47명에 대한 수사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최형우 의원 아들 부정입학과 관련하여 무혐의 처리한 경위를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금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입시부정 관련자를 수사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경찰에서는 지난 4월 10일 경원학원 입시부정 사실을 인지수사에 착수하여 경원전문대에서 91년부터 93년까지 98명이 부정입학한 것으로 밝혀내서 이미 그 명단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4월 22일 입시부정 관련자 중 학부모 51명을 소환 조사하여 18명은 구속하고 10명은 불구속으로 1차 송치한 바 있습니다.

1차 송치 후에 나머지 47명에 대해서는 학부모 12명을 추가 소환하여 8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하여 추가 송치하였고 현재 35명은 소재수사 등으로 계속 수사 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으로 최형우 의원 차남 최재완의 경원전문대 부정입학 관련 수사는 발설한 것으로 보도된 동 전문대 박춘성 교수와 90년도 입시부정 작업을 하였다는 서광수 교수 등 5명의 교직원과 최재완의 모 원영일 그리고 경원대 서양학과의 서정순 교수를 소환 조사하였으나 모두 부정입학 관련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90년도 입시관련 서류가 보존연도 3년이 경과한 관계로 폐기되어 구체적인 혐의점을 발견할 수가 없어서 계속 수사 중에 있습니다. 무혐의 종결처리한 바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금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부정입학 관련자에 대해서는 자료를 입수한 후 수사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낙주**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김두희** 법무부장관입니다.

이협 의원님, 김기도 의원님, 박계동 의원님, 박주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순차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협 의원님께서서는 검찰의 자체 사정활동 내용과 앞으로의 구상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 의원께서 검찰이 개혁시대에 국민 여망에 맞게 새롭게 정화되어야 한다는 충고의 말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검찰은 변화와 개혁의 시대적 흐름에 적극 부응하고 남의 잘못을 다스리는 기관이 먼저 더욱 깨끗해져야 한다는 기본인식하에 철저한 자체 기강확립을 위하여 각급 검찰청별로 자체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별한 현안이 있을 경우 수시로 법무부나 대검찰청에서 감찰팀을 파견하여 집중감찰을 하는 등 자체 사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초 전국검사장회의를 개최하여 각급 검찰청별로 철저한 감찰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지시하였고 같은 달에 서울지방검찰청 등 23개 청에 대해서 기강감사를 실시하여 직무관련 비리의 유무와 복무기강 대민봉사자세 등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체 사정을 통하여 깨끗한 검찰상을 구현하는 길만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모든 검찰공무원이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도록 철저한 자정노력을 전개해 나갈 작정입니다.

다음 이 의원님께서 동화은행사건의 수사진척 상황 및 언론에 거명되는 의원명단의 공개용의, 외압 여부, 향후 수사방침 등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현재까지의 수사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 4월 21일 안영모 동화은행장은 은행관계자를 조사하고 관계증빙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안 행장이 89년 10월부터 93년 3월까지 사이에 가짜영수증 등을 첨부해서 인출하는 방법으로 조성한 비자금 25억여 원 중 18억 원을 은행임직원들에게 분배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또 93년 4월 초순경에 주식회사 동방전선대표 이병익으로부터 70억 원의 대출자금으로 5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져서 4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구속한 것입니다.

현재 검찰로서는 안 행장이 조성한 비자금의 더 있는지의 여부와 비자금의 사용처에 관해서

면밀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안 행장의 진술도 명확하지 않고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서 현재까지 비자금을 수수한 인사들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부 언론에 거명되고 있는 인사들은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근거로 해서 언론에서 추측보도를 한 것으로서 검찰에서는 언론의 추측보도를 삼가 달라는 강력한 요청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동화은행사건은 물론이고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대상자의 신분이나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성역 없이 수사를 전개해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법에 따라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수사와 관련한 외부의 영향이나 간섭은 일체 없으며 앞으로는 만의 하나 외부로부터 간섭이 있다면 이를 철저히 배제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협 의원님께서서는 속칭 빠짱꼬라 불리는 슬로트머신업자 정덕진사건 처리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물으셨고 김기도 의원님과 박계동 의원님께서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결과 등을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수사와 관련하여 언론에서 확인되지도 않은 풍문이나 추측을 근거로 해서 정치권 인사들과 경찰 검찰 안기부를 비롯한 수사·정보기관의 인사가 개입된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어서 여러 의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검찰에서도 이와 같은 보도로 인해 수사에 장애가 초래되고 당사자의 명예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언론에 각별한 협조를 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사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점에서 비롯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에서는 3월 31일부터 정덕진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여 현재까지 수사를 계속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수사한 결과 동인이 89년 2월 14일 조직폭력배 두목인 김태춘과 공모하여 광주 신양파크호텔 오락실 경영권을 갈취하고 88년부터 90년까지 사이에 부가가치세 등 25억 원을 포탈한 혐의가 우선 인정이 되어서 지난 5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구속하였고 현재 여죄를 추궁 규명 중에 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결과 밝혀진 정덕진의 실명은행구좌 3개와 가명구좌 152개의 자금흐름과 슬로트머신업체의 지분소유관계를 밝히는 것이 이 사건의 전모를 규명하는 열쇠라고 보고 가용 가능한 인력을 모두 투입하고 전국 검찰이 공조체제를 갖추어 진상규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협 의원과 박계동 의원님께서서는 세간에 대통령 영식이 이 사건에 관련되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와 같은 내용은 전혀 근거 없는 뜬소문으로서 사실로 확인된 바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또한 검찰간부들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이들도 이 사건과 관련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없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비호세력이라고 인정되는 인사가 밝혀지면 지위나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협 의원님께서 이동근 의원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의 형평성을 잃은 것이 아닌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지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때 제가 답변 올린 바와 같이 이 의원님 구속과 관련된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먼저 혐의사실과 경위가 어떻든 간에 현역 국회의원을 구속한 데 대하여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법무부장관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검찰은 수사결과 이 의원의 혐의사실이 인정되어서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고려하더라도 그 사안의 정도와 다른 유사사건과의 형평상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구속하게 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검찰로서는 수사의 단서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나 적법절차에 따라서 수사 착수를 하고 있고 이 의원의 구속도 이러한 일반적인 사건처리의 예와 기준에 따라서 처리된 것으로서 이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이 염려하고 계시는 정치적 의도가 개재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김기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서는 먼저 구속된 전직 해·공군

참모총장들이 총장이 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돈을 갖다 준 사실이 없는가 하는 의문을 표시하셨습니다마는 수사결과 구속된 전직 참모총장들이 자신들이 승진이나 총장취임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금품을 공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김 의원님께서서는 교도소 비리에 대한 개혁 차원의 척결방안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김 의원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바대로 아직도 교도소 내에서 재소자의 처우와 접견 등과 관련해서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 점 법무행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저로서는 심히 송구스럽고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잔존하고 있는 교정비리는 담배를 비롯한 부정물품의 제공과 부정서신의 연락, 거실 지정 및 병실 수용과 관련한 부정, 기타 수형생활에 편의제공을 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비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동안 자체 감사와 단속을 계속하여 부조리의 발본색원에 진력하여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정부조리는 무엇보다 교정공무원들의 기강해이와 사명감의 결여에서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

교정당국에서는 93년도를 교정부조리 없는 해의 원년으로 정하고 전 교정공무원에 대한 정신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펴고 있으며 비리직원에 대해서는 엄정한 형사처벌과 함께 규칙위반 재소자에 대해서도 징벌처분을 철저히 행함으로써 기필코 교정부조리가 없는 깨끗한 교정풍토를 조성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교정행정의 쇄신차원에서 교정비리를 유발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의 개선책도 강구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교정공무원들이 심기일전하여 교도소야말로 행형이 지향하는 이념 그대로 재소자를 사랑으로 교화하고 보람으로 선도하는 진정한 교정교육의 현장으로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장관으로서 각별히 지휘 감독해 나갈 작정입니다.

다음 박계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박 의원님께서서는 지난 3월 6일 사면 이후 교도소에 남아 있는 양심수의 숫자, 방북사건과 관련된 서경원 박양균 등과 임종석 박종렬 등 전대협 관련자를 사면에서 제외한 이유, 김선명 등 장기

좌익수를 석방하지 않은 이유, 사노맹 관련자에 대한 사면기준과 박기평의 감형 용의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법무부에서는 복역자에 대하여 죄명별로 통계를 관리하고 있을 뿐 소위 양심수라는 개념으로 통계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숫자를 말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오늘 현재 전국 교도소에는 간첩 등 공안사범이 92명, 기타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80명, 노동관련법 위반사범 24명, 화염병사용처벌법 위반사범 12명,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사범 12명 등 도합 220명이 형이 확정되어서 복역 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 6일 자 사면은 특별사면으로서 형이 확정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개개인의 범죄사실, 복역기간, 행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실시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면심사과정에서 간첩 등 죄질이 중한 반국가사범과 극렬폭력사범 등은 자유민주체제 수호와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경원 등은 그러한 심사기준에 맞지 않아 부득이 제외되었으며 박종열에 대해서는 학생신분임을 감안하여 잔형기의 2분의 1을 감형하였음을 말씀 올립니다.

또 박 의원님께서 거명하신 김선명 등 장기좌익수들은 모두 북한에서 남파된 간첩들로서 현재 까지도 한반도는 적화 통일되어야 한다는 망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입니다. 따라서 국가안전과 체제수호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로서는 이 사람들을 장기 복역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석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지난번 사면과정에서 70세 이상 된 장기좌익수 6명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형집행정지결정으로 석방한 바 있으며 앞으로 장기수 중 고령자에 대해서도 인도적 차원의 배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 의원님께서서는 사노맹 관련자에 대한 사면기준과 박기평의 감형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사노맹사건 관련자들의 사상적 위험성과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3월 8일 자 사면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만 그 관련자 중에서도 복역 중 반성의 빛이 뚜렷한 2명에 대해서는 사면조치로 석방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박기평과 백태웅은 사노맹을 구성하여 수괴로 활동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박기평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확정 복역 중이고 백태웅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에 재판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선고형의 차이는 법원에서 반성의 정도 등을 비롯한 여러 정상을 참작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백태웅이 법원에서 박기평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박기평을 감형할 수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박 의원님께서서는 제3자개입 등 노동사범에 대하여 전면 석방조치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지난 3월 6일 사면대상에서 제외된 노동사범들은 황산을 투척하여 인명에 상해를 가하는 등 극렬 폭력행위를 자행하였거나 위장 취업하여 노사분규를 배후에서 조종한 사범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국제노동규약에서 처벌을 금지하고 있는 제3자개입사범은 그 개입의 내용이 단순한 조언이나 상담·지도적 차원에 불과한 경우를 의미하고 폭력을 사용하거나 파괴적인 노사분규에 개입한 사람들에게까지 처벌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사범들에 대하여서도 복역자들이 개전의 정을 보이고 행상이 양호할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통상적인 범절차에 따라 가석방의 조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 박 의원님께서서는 정치적인 이유로 수배 중인 300여 명에 대한 구속방안 및 수배자의 자수 시 구속기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수배 중인 공안사범은 대부분 밀입북사건에 관련되었거나 사노맹 등 반국가단체를 구성한 사람 등 국가보안법 위반사범과 상습 화염병투척자, 과격폭력시위의 주동자와 노사분규를 주도하거나 이와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공범이 이미 유죄판결을 받아 복역을 완료하거나 복역 중에 있어 범의 형평상 일괄적으로 수배를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6일 실시한 사면 복권의 정신을 최대한 존중하여 이들 수배자들이 자수 또는 검거되는 경우에는 신중히 검토해서 구속 불구속 등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개개 사건의 내용이나 가담 정도 등이 각각 다르므로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누구누구를 구속한

다거나 그 구속기준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 의원님께서서는 시국관련 수형자를 강제 징집하는 병역법 시행령 103조를 개정하고 개정 전이라도 시국사건 관련자들을 징집에서 면제시키도록 구제할 용의가 없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만 병무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징집면제 여부는 국방부 소관사항이므로 제가 답변드릴 위치에 있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의원님의 말씀취지를 국방부장관에게 전달하여서 추후 국방부에서 답변 올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서는 지난 30년간 발생한 간첩사건과 유서대필 등 각종 시국사건 및 이내창 씨 등에 대한 의문사사건 등의 재조사와 명예회복, 보상조치 용의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말씀하신 사건들은 이미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유죄 확정된 사건이거나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에서 타살혐의 여부에 대한 수사를 하여 종결된 사건들입니다.

이미 법원의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사실인정을 뒤집을 만한 유력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는 등을 비롯한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현행법상으로는 다시 재판할 수는 없습니다. 소위 의문사사건에 관하여도 일반적으로 타살 등의 범죄행위 등을 인정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재조사를 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관점에서 별도의 보상조치 등도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 의원님께서서는 구속되어 있는 공안사범들에 대한 추가사면·복권의 일시, 대상 폭과 기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정부는 제14대 대통령취임을 경축하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갈등시대의 반목을 해소하여 국민화합을 이룩하기 위해서 지난 3월 6일 획기적인 사면복권조치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사면·복권 과정에서 정부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포함시키려고 노력하였으나 당시까지 형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법률상 사면의 대상이 되지 않았거나 또 그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서 제외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공안사범에 대하여 추가로 사면·복권을 실시하는 문제는 지난 3월 6일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대폭적인 사면복권을 실시한 지가 두 달밖에 되지 않아 현재 단계에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 추가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께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현재로서는 그 시기나 대상 폭을 말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 의원님께서서는 용팔이사건 등의 이승완이 현재 수배상태에 있는지 여부와 수배되어 있다면 검거하지 않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만 이승완은 소위 용팔이사건으로 불리우는 통일민주당 창당방해사건과 관련하여 90년 12월 28일 이미 징역 1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되어서 그 형을 모두 복역하였습니다. 현재 다른 범죄와 관련하여 지명 수배된 사실은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 박계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맘모스상가 관련사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2년 7월 13일 맘모스상가 명도집행과 관련하여 관할 청량리경찰서에서 상인대표 3명을 구속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상인들이 집달관의 범절차에 따른 명도집행에 대해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집단적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명도집행에 동원되었던 인부 김용범이라는 사람이 허위진단서로 피해신고를 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5월 1일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서 그 사람을 무고죄로 구속하고 그 사건에 관하여 수사를 계속 중인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집단민원 관련 사건이므로 엄정 공평히 수사해 나가도록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주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서는 구속영장 남발방지를 위한 형사소송제도상의 개선방향과 인신보호법 도입에 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 현행 헌법 및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하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구속할 수 있도록 하여서 구속사유를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구속사유를 심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구속을 당한 경우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

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속의 당부에 대하여 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속영장의 남발방지를 위한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요구하고 있는 한편 부당한 구속에 대한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실질심사제, 보석허가요건의 완화 등등 인신보호를 위한 제도의 도입은 현재 형사소송법 개정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신보호법 내용의 기본 뜻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라도 불구속수사를 확대하고 사법경찰관의 구속영장 신청 시 또는 법원에 대한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시에 이를 철저히 검토하는 한편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설정된 구속기준을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부당한 구속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시에 이규택 의원님께서 총리께 질문하신 노소영 씨 부부관련 사건에 대하여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택 의원님께서서는 노소영 씨 부부의 소환조사문제와 미국은행에 예치한 자금의 출처 등에 관하여 질문이 계셨습니다.

노소영 씨 부부는 지난 5월 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지방연방법원에서 판결 선고 예정이던 재판에 출석하기 위하여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에서는 노 씨 부부가 귀국하는 대로 소환하여 미국은행에 분산 예치한 돈의 출처와 외화도피혐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서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낙주** 다음은 교육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오병문** 교육부장관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으로서 의원님 여러분과 국민 앞에 먼저 사과의 말씀을 간곡히 올리겠습니다.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대학입시시험에 부정과 비리가 개입되었고 국립교육평가원 직원이 학력고사의 정답을 유출시켜, 교육을 걱정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들은 물론 전국의 국민들에게 크나큰 실망과

충격을 안겨 드리고 분노와 불신을 가져오게 된 점 참으로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가슴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운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이번 일을 거울삼아 저를 비롯한 40만 교육자들은 뼈를 깎는 아픔으로 자성하고 이 나라 교육을 바로 세우는 일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다시는 의원님들께 걱정을 끼치지 않고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오니 널리 용서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하 의원님께서 교육개혁위원회는 관계부처 장관과 관련 민간단체를 포함하는 민관협동기구가 되어야 하며 심의 의결권을 가지는 기구로 설치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는 데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교육 전반에 걸쳐 일대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교육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대통령직속기구로 교육개혁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공언한 일이 있으며 현재 전문가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개혁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발족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육자치제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교육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물어 주셨습니다.

지방교육자치제는 지방의 교육행정기관과 지역주민의 활발한 참여로 교육의 민주화를 이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만 제도의 초창기인 점을 감안할 때 아직 그 성과가 크게 만족하지는 못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그동안 전문연구진을 구성, 교육위원회의 기능강화 차원에서 집중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그간에 연구결과를 기초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도의회와의 기능 재조정을 통하여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입안하기 위해서 선진 각국의 제도 비교연구 등 지속적인 정책연구와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으로 95년 제2기 교육의원 및 민선자치단체장 선출시기에 맞추어 실시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김 의원님께서 대학입시제도 개선에 관하여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대학입시제도 개선방안은 단기적 측면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연구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대학에 대한 통제와 자율문제,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덜어 주는 문제, 그리고 입시비리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민의 공감대를 토대로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입시제도 개선의 기본방향은 첫째,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를 기하고 수험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덜어 주며 둘째, 대학의 자율성을 신장하고 셋째, 입시비리를 예방하여 공정성을 최대한 높이도록 하는 데 들 것입니다.

아울러 입시제도 개선과 병행하여 대학의 야간학과와 전문대학의 정원을 대폭 확대, 야간대학의 정원 확충, 방통대 산업대 등 정원 조정으로 입시지옥을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며 또한 앞으로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될 교육개혁위원회에서 대학입시와 관련된 제도 전반에 걸쳐 단기·중기 및 장기교육정책 방향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김 의원님께서 사립대학의 재정난 해소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사립대학 재정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하여 정부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90년부터 재정지원을 시작하여 금년도에는 6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 지원규모를 점차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98년 교육재정이 GNP 5% 달성할 경우에 연 2000억 원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립대학 스스로도 저수익성 재산의 고수익성 재산으로서의 전환과 건전재정운용 등 자구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의원님께서 대학입시부정 사건이 문제되자 대학에서 본고사를 취소토록 교육부가 지시하였다는 말이 있다고 지적하시고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도 되는가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새 입시제도는 고등학교 내신성적, 대학수학능력시험, 대학별 본고사 등 세 가지 항목을 기본 골격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 제도는 내신성적을 40% 이상 반영하여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국가 관리의 수학능력시험으로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대학별 고사를 허용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바람직한 교육 목표를 적절히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대학별 고사 실시대학이 당초 40개 대학에서 9개로 줄어든 것은 대학들이 출제와 공정성에 대한 부담을 느껴 대학 스스로 유보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 대학입시제도가 바뀐 것은 아님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9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수험생들이 혼란 없이 시험을 무사히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저희들은 다하겠습니다.

다음 이 의원님께서 전교조 해직교사 복직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전교조 해직교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인간적 차원, 법적·제도적 차원, 교육적 차원, 사회적 차원을 고려하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앞으로 전교조 측뿐만 아니라 사회 각 계각층과의 다각적인 대화를 통해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다양한 해결방안을 마련한 뒤 최종결정을 할 생각입니다.

끝으로 이 의원님께서 교사채용과 관련하여 금품수수가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 여부와 근절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교직사회에서는 아직도 일부 교직자들의 사명감과 자정노력의 부족으로 금품수수 등 부조리가 잔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교육계의 부조리를 완전 척결하고자 교원채용과 승진 등 교원인사와 관련하여 금품수수나 부조리가 없도록 지속적인 감사와 감찰활동을 통해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교권회복을 위해서도 공직자청탁압력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적발될 경우에 명단 공개, 교육계 추방 등 엄중 처벌함으로써 교원인사 관련 부조리를 뿌리 뽑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조국 근대화 선진조국창조를 내걸고 잘살아 보기 위해 배우고 가르쳐 온 교육에서 이제 2000년대를 목전에 둔 지금 바르게 살아 나가는 교육으로 바꾸어볼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함께 우리 학교현장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교육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뜻의 질책으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우리 교육이 입시 위주의 교육에 치중한 나머지 인간교육에 소홀했다는 점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사회가 현대화·산업화·다양화하는 과정에서 도덕성이 실추되고 가치관의 혼란을 가져온 것도 사실입니다.

교육부에서는 도덕성 회복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덕성 함양을 위해 교육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 인간교육을 초석으로 하여 그 위에 과학기술교육을 건설하고자 인간교육방안을 수립하여 사람답게 그리고 바르게 살아가는 교육을 실현하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둘째로 김 의원님께서 총리께서 국회본회의 보고 시 밝힌 재수생 누적현상의 점진적 해소, 대학정원 조정권의 단계적 대학 일임, 입시난 완화 등의 구체적 추진방안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93만여 명인데 비하여 4년제 대학정원은 23만여 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70만여 명은 진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중 17만여 명은 전문대학에 진학하고 9만여 명은 개방대학을 비롯한 여타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게 되므로 약 44만여 명이 진학을 못 하고 있어 재수생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한편 학부모들의 잘못된 의식으로 자녀들의 능력과 적성에 관계없이 대학에 진학시키려는 과열된 교육열이 재수생 누적현상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입시지옥의 해소는 새 정부의 공약인 동시에 교육부정책의 주요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될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재수생들의 흡수대책, 실업계 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의 확충, 그리고 대학정원의 자율화 등 종합대책을 연구 검토하여 현 정부 임기까지 입시지옥을 해소함으로써 국민의 고통을 덜어 주고 교육 본연의 정책 구현에 힘을 다하겠습니다.

셋째로 김 의원님께서 불법과외 근절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불법과외는 고액비밀과외, 현직교사와 학원강

사가 비밀로 행하는 교습행위, 그리고 무인가학원에서 입시과목을 지도하는 행위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불법과외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자녀만 대학에 입학시키면 된다는 학부모들의 그릇된 교육관과 가치의식의 전도에 기인한 것이 사실입니다.

불법과외를 근절하기 위하여 지난 4월 중에는 집중 홍보를 하였고 반상회를 통한 협조와 계도 활동을 한 바 있으며 교육부를 비롯하여 시·도 교육청, 시·도·구 교육청, 학교 교사들이 자성하고 합심하여 과외병폐를 추방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 경찰 교육청이 협력하여 강력한 단속활동을 펴고 있으며 적발되면 명단을 공개하는 등 엄중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김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사학발전정책의 일환으로 기여입학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의향은 없는가라고 물어 오셨습니다.

기여입학제는 국가재원의 한계성, 등록금 인상의 제약성 등을 감안한 새로운 가용재원의 발굴 차원에서 일부 사립대학에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유관단체에서 이 제도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세미나 공청회 등을 개최한 결과,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기여입학제 도입은 사립대 재정난 완화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과 같은 치열한 대학입시경쟁하에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부정적 요소가 많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김 의원님께서 교육부 인사쇄신책의 일환으로 교육전문직을 대폭 등용할 의사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교육부의 기능 중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재의 연구 개발과 제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교육전문직으로 보임하고 있으며 부서에 따라 전문직 공무원을 보완 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직이 담당하여야 할 부서에는 과감하게 교육전문직을 등용하여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님께서 과학교육진흥을 위한 재원 확충과 과학교사의 자질향상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과학지식과 탐구의욕

창의력을 제고함과 아울러 국가사회가 요구하는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93년부터 97년까지 각급학교의 과학실습실과 실험실습기자재를 확충하여 여건 개선, 학습방법 개선 등 과학교육 진흥에 55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과학교사의 자질을 높이는 것은 바로 과학교육을 진흥시키는 첩경이므로 교사들의 실험연수를 확대하고 금년부터 95년까지 중학교 과학교사 3만 5000여 명에 대하여 집중적인 연수를 실시하겠으며 선진국의 교수·학습 방법과 정보수집을 위해 과학교사 국외연수기회를 늘리고 '93 과학교육의 해' 사업의 일환으로 500여 명을 선진국에 연구시킬 계획입니다.

그 외에 김 의원님께서 교육방송의 운영상황을 걱정하시고 교육방송이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공보처장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교육방송의 기능과 역할 등을 정착시키도록 당부하셨는데 참으로 고마운 격려의 말씀으로 명심하고 교육방송의 제자리를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계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 의원님께서 교육계의 비리사태와 관련하여 50여 명이 징계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직은 책임을 지지 않고 평가원 직원과 전문직에게만 책임지우는 이유를 물어 왔습니다.

교육계 비리사태와 관련 지난 5월 1일자로 교육부분부의 간부진에 대하여 문책성 인사를 포함하여 개혁적인 인사로 157명을 인사 단행하였습니다. 교육평가원의 입시답안 유출사건과 관련한 징계는 소관업무를 관장한 부서와 지휘책임자의 한계에 따라 대상자를 엄중 문책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들 대부분의 전문적인 것은 시험관리기능상 인쇄본부에는 대부분 일반직으로 구성하지마는 시험출제본부의 관리요원은 그 전문성을 고려하여 대부분 전문직으로 구성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박 의원님께서 교육개혁위원회의 설치 운영현황을 물으시고 아울러 대통령공약사항인 교육재정의 GNP 5%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계획위원회의 설치에 관하여서는 김종하 의원님께서도 같은 내용

을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김 의원님께서 대한 답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교육재정을 GNP 5% 수준까지 확충하기 위해서는 그 비율을 0.2 내지 0.3% 순증시켜야 하며 그 방법으로는 국고지원의 증액 및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상의 교부율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98년까지 GNP대비 교육재정이 5% 수준으로 확보될 경우 학급당 학생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하고 교육시설을 현대화하며, 중학교 의무교육의 전국적 확대, 교수 1인당 학생 수 20명으로 감축하는 등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이 조성되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룩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93년도의 인건비 및 운영비 비율이 80.6%에서 98년도에 77.3%로 줄어들고 시설비를 포함한 사업비는 93년도 19.4%에서 98년도에는 22.7%로 증가되어 교육환경 개선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교육재정이 GNP 5% 수준으로 꼭 확보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말씀드립니다.

박주천 의원님께서 청소년문제를 말씀하시면서 교육제도, 정책은 총체적으로 개혁하여야 하고 청소년을 사회의 건강한 일꾼으로 되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종합대책은 교육부가 맡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재임 중 청소년문제를 해결할 종합대책을 완성할 의향을 물어 오셨습니다.

청소년문제 전반에 관하여 의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교육부에서는 과열된 입시 위주의 교육을 탈피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 교육과정에서 진로교육을 강화하여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진로를 스스로 이해하고 선택하게 함으로써 진학열기를 진정시키는 한편 학생들에게 건전한 가치관 형성과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의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별 지역별 선도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 등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학교 주변 유해업소의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하고 있는 소년소녀가장, 사회시설 수용학생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도록 하는 지역유지와 결연 등 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은 문화체육부와 법무부 내무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토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낙주** 다음은 문화체육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부장관 이민섭** 문화체육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하 의원님과 김기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하 의원께서는 미국 등 선진국의 영화·음반산업이 우리나라의 문화산업에 크게 침투가 되어서 우리의 영상·음반산업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빠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현재 저희 영상산업 분야는 국제화·개방화 추세에 따라서 외국의 주요 메이저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침투해 오고 이로 인해서 우리 국내산업이 크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의 부에서는 이런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국산영화를 살리고 또 새로운 분야인 비디오·음반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책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국산영화의 진흥을 위해서 경기도 마석에 종합촬영소를 오는 96년도까지 대규모로 지어서 우리 영화제작산업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로서는 영화산업이 금융·세계 면에 있어서 중소기업과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영화산업도 금융과 세계 면에서 많은 지원과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재 146일간 연간상영을 의무화하고 있는 국산영화의 스크린쿼터제도 저희가 철저히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실제로는 현재 각 지방에서 국산영화를 상영해야 되는 의무일수에 외국산 영화를 상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감시와 적발을 통해서 스크린쿼터제가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비디오와 음반산업에 대해서는 우리 첨단분야의 산업육성이라는 차원에서 특히 기술개발에 주력을 하고 또 국내영상업체들의 국제적인 경쟁력 또 자체 체질강화를 위한 여러 가

지 지원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지원이나 보호시책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각 산업에 종사하는 제작자 또 경영자들이 자구노력으로 보다 좋은 질이 훌륭한 그런 영화와 또 여러 가지 첨단음반산업의 경영을 해주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국산영화가 성공을 한 예로서 '서편제'라는 그런 영화는 우리 고유의 판소리를 소재로 해서 또 우리 민족의 강인한 장인정신을 소재로 해서 영화를 만든 결과 커다란 반응과 벌써 10만명을 돌파하는 그런 좋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역시 근본적으로 제작자들이 좋은 그러한 영화 또 작품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 김종하 의원님께서서는 통일 이후에 우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문화동질성의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민족문화의 원형을 복원할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북한 측에 제의를 하자는 말씀이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민족의 동질성 회복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고 50년 가까운 분단의 현상에서 이 동질성 회복을 위한 양쪽의 부단한 노력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써 국립국어연구원에서 지금 10개년계획으로 종합국어대사전을 편찬함으로써 언어의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10개년계획이 지금 예산의 부족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이러한 계획을 5개년계획 정도로 앞당겨야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축성 있는 대비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작업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부단히 그러한 노력도 계속을 하겠습니다.

특히 남북기본합의서의 원칙하에서 통일원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서 남북한이 상호 공감할 수 있는 민속이나 문화재 고전문학 등 이러한 전통민족문화의 프로그램을 교류할 것을 북한 측에 제의할 생각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족문화원형복원위원회는 저희로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좋은 제의로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김기도 의원님께서서는 '책의 해'를 맞이해서 과연 우리의 독서현황이 어떠한가 하는 질문

이 계셨습니다.

금년도를 저희가 '책의 해'로 정하고 이 독서기반의 전 국민적 확충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범국민적 독서운동캠페인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어저께 삼성동 무역회관에서 있었던 전국도서전이 이러한 계기를 마련하는 중요한 하나의 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4월 15일 현재 이 도서상품권의 판매량을 보면 약 120만 매로서 작년 한 해에 모두 합쳐서 121만 매가 나간 데 비해서 벌써 4월 15일까지 그 판매량이 동등하게 됐다,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 동기에 비해서 세 배로 도서상품권의 판매량이 늘었다 하는 것은 우리의 독서열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다는 것으로써 저희가 판단되고 따라서 금년도에 우리가 선진한국의 정말 또 선진국민의 자질을 갖출 수 있는 범국민적인 독서기반 확충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전국 도서와 벽지에 필요한 책들을 보내는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어서 약 1만 권의 책을 돈이 없고 형편이 어려운 전국의 농촌과 벽지 도서지역에다가 무료로 배부하는 것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출판사 창고에 쌓여 있는 재고서적들을 저희가 다 수집해서 재고서적유통센터를 만들어서 그로 하여금 전국의 어려운 사정에 있는 우리 독서인구에 대해서 이러한 책을 보내는 운동을 전개하겠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김기도 의원님께서서는 오는 98년이나 2002년도에 아시안게임, 다시 말해서 하계아시안게임을 우리가 유치했으면 좋겠는데 특히 부산에서 이러한 아시안게임을 치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현재 98년도 아시안게임은 이미 태국 방콕에서 개최하기로 결정이 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빨리 개최할 수 있는 것은 2002년도의 하계아시안게임을 우리나라가 개최할 수 있는데 이것도 96년도의 OCA총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에서 결정이 납니다. 이러한 아시안게임의 부산유치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부산지역의 발전과 지역적 균형개발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로서는 이미 아시안게임과 올림픽대회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이러한 경기유치 의사를 제의해 오면 여러 가지 수송능력 또한 수용능력 소요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 부산직할시에서 2002

년도 하계아시안게임을 개최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 김기도 의원님께서도 이 청소년문제가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의 말씀과 아울러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청소년문제는 그 성격상 청소년의 유해환경문제는 내무부와 법무부, 또 정서함양과 신체 단련은 문화체육부, 학교교육에 대해서는 교육부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의 성격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국무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정부 내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고, 또한 저의 부처로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사회기강차원에서 또 유해환경의 제거라는 차원에서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 문화체육부로서는 청소년을 위한 수련거리, 수련원 또 수련마을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문제를 추진해 나가겠고 또 지도자의 양성을 적극화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부터 청소년 육성을 위한 5개년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서 종합적으로 또 유기적으로 이 청소년의 육성문제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기도 의원님께서도 한일 간의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일본영화를 수입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일본영화 수입문제는 먼저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의 여론과 정서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작년도 2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MBC KBS 또 한국리서치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기관이 이 문제에 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로는 약 70% 내지 80%의 국민이 일본영화의 수입은 아직 어렵다 또 반대하는 이런 의견이 절대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시대변화에 따라서 이러한 여론수렴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해서 또한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여기에 상응하는 전향적인 그러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하는 그러한 답변을 올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낙주** 다음은 보건사회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부장관 송정숙** 보건사회부장관입니다.

먼저 김종하 의원님께서 국무총리께 하신 질문에 제가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님의 질문은 국가관리 차원에서 노인복지대책을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방안 등이 적극 검토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노인인구가 점차 증가해 감에 따라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고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소득보장 보건의료 주거보장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확충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노인복지대책위원회를 운영하여 노인들이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득보장을 위한 시책으로는 노령수당 지급을 88년부터 시행된 연금제도의 확대 실시,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취업알선 및 고용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건강시책으로는 노인건강진단사업, 전문요양시설 확충 및 노인가정의 방문진료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노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인성만성질환자의 예방치료 재활 등 종합적인 보건의료와 의료비 절감 등을 위한 노인건강관리법의 제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부모 봉양품토 조성을 위한 세제감면 혜택과 국민주택분양의 우선권 부여, 효행자 포상을 실시함과 아울러 노인들을 위한 유료시설과 노인주택 등 노인복지시설도 다양하게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정부 재정형편상 복지수준이 노인들이 욕구수준에 미흡한 실정임을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연금확대 등 소득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노인건강의 제도적 보장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재원조달도 정부재원뿐 아니라 민간재원 활용을 확대하는 등 노령화사회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도 의원님과 박주천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차례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도 의원님께서도 국민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의료와 식품, 약품행정의 개선방안을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전 국민 의료보험 실시로 인하여 의료 이용이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종합병원에서의 입원난과 불친절문제가 불편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과 의약품의 품질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수준의 기준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민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하여 앞으로 의료기관의 시설 확충과 서비스 개선을 정부의 중점개혁과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민 식생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국민 다소비식품을 중심으로 품질기준을 엄격히 정하여 시행하고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를 보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약품에 있어서도 시설과 제조기준을 강화한 우수약품 제조관리기준을 곧 시행토록 하여 선진외국에 비해 손색이 없는 의약품을 생산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주천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의원께서 주신 질문은 논산 신경정신과의원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향후 정부의 정신질환관리에 관한 근본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점차 증가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전문적인 치료 및 보호를 위하여는 그동안 정부에서는 각 권역별로 국공립정신병원을 신축하고 정신요양원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전문치료시설 및 인력이 부족하고 정신질환관리체계도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는 약 95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 중 입원치료를 요하는 환자는 11만여 명으로 이들의 치료를 위하여는 3만 4000여 병상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현재 확보된 전문병상은 소요의 50%에 불과한 1만 7000여 병상으로 지속적인 확충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현재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은 전국에 74개소가 있어 1만 7800여 명을 수용 보호하고 있으므로 입원이 필요한 환자는 모두 보호를 하고 있는 셈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단순수용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들 요양원을 보강하여 전문 치료적 기능을 갖추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앞으로 정신보건법을 제정하여 정신질환에 관한 홍보계도와 아울러 환자의 조기발견 조기치료 및 사회복지

귀, 재활을 위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며 그와 함께 전문병상의 지속적인 확충과 정신요양원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정신의료 시설에 대한 별도의 시설, 인력의 기준 및 입퇴원절차를 엄격히 규정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문인력 및 병상의 수급과 정신의료 전달체계 등 종합적인 정신질환관리대책을 마련하여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낙주** 다음은 노동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이인제** 노동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하 의원님께서 과거 노사분규를 주도했던 세력들이 전환기적 상황을 이용, 불순한 의도로 노사문제에 개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들에 대한 실태파악 여부를 총리께 질문하셨습니다.

노동부장관이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날 우리 산업사회에는 소위 노동운동가 및 그 단체들이 노사문제에 깊이 개입하여 노동운동을 과격하게 이끌었던 사례가 없지 않았음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투쟁적인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적인 비판이 제기되고 노사 당사자 사이에 상호 자제와 양보를 통해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관행이 성숙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고통분담을 통해 경제활력을 회복하자는 노사 간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근로자들의 노동운동도 과거 이념적 투쟁적인 성격으로부터 합리적이고 실리 추구적인 방향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부는 과거 이념적 노동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과도 격의 없이 적극적인 대화를 통하여 그들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노동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노사관계의 불안요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협 의원님께서 아폴로산업주식회사와 국제전광 노사분규에 공권력이 투입되었는데 산업현장에 대한 공권력의 투입이 노사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노동부의 입장에 대

하여 물으셨습니다.

김기도 의원님께서도 이와 관련한 노동정책 방향에 대해 물으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폴로산업의 노사는 93년도 단체협약 갱신을 위하여 93년 2월 24일부터 4월 27일 사이에 110개 조항에 대한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57개 항이 합의되지 않자 노동조합은 4월 28일 이후에 사실상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아폴로산업의 사용자 측이 노동조합의 간부들에게 업무방해혐의로 경찰에 고소함에 따라서 경찰이 이에 대한 수사를 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므로 검찰의 지휘를 받아 노동조합장 등 2명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5월 6일 새벽 회사에서 농성 중인 이들에 대해 영장을 집행한 것이 아폴로산업에 대한 공권력 개입의 개요입니다.

국제전광은 전기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법정관리 되어 오다가 93년 4월 12일 부도가 나자 법정관리인이 잠적하고 채불임금 청산을 둘러싸고 노동자들의 동요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회사 노동자 70여 명이 5월 7일 대주주인 한국유리본사 현관에서 채불대금 청산을 요구하며 농성을 계속하자 한국유리 측이 이들을 경찰에 고발해 음에 따라서 같은 날 오후 3시 30분경 농성근로자 전원이 경찰서에 연행되었다가 5시간 후인 저녁 8시 30분경 모두 훈방 귀가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 새 정부출범 이후에 노사문제가 노사 당사자 간에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경찰력이 투입되는 불행한 사태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 노동정책의 책임자로서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노사관계 안정은 공권력에 의한 통제가 아니라 노사 양측이 동의할 수 있는 새로운 규범과 건전한 노사관행의 정착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기본입장입니다.

그러나 이직도 우리 노동현장에는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 근로자 측의 적법절차를 무시한 행위, 쟁의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한 작업거부와 같은 불법행위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동부로서는 어떤 경우에도 공권력의 개입 이전에 모든 노사분규가 자율적으로 해결되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불법행위가 있을 때는 그것이 어느 측

에 의한 것이든 사법권의 집행이 엄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며 여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의 이 두 회사에 대한 경찰력의 투입은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졌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는 앞으로 이 두 회사의 노사분규와 관련하여 더 이상의 희생이 발생되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사 양측에 대화와 타협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계동 의원님께서 노동법 개정과 관련하여 현행의 복수노조금지, 제3자개입금지, 노조의 정치활동금지조항 등은 국제노동규약에도 위배되는 후진적 법조항이라는 지적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개정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현행 노동관계법은 우리의 경제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 노동조건 기준과 노동관계를 합리적 생산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상당 부분 개정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작년 4월부터 노사 공히 대표 18명으로 노동관계법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등 5개 노동관계법의 개정안 시안 작성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이 연구위원회에서는 노사단체가 제시한 개정의견 및 각계의 의견과 외국의 입법례 그리고 ILO의 노동기준 등을 참고하여 현재 개정시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연구결과가 노동부에 제출되면 이를 바탕으로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금년 내에 정부안을 작성해서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예시하신 복수노조금지, 제3자개입금지, 정치활동금지조항 등의 개정 여부에 관해서 지금 단계에서는 언급할 입장에 있지 못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더 말씀 드린다면 어떠한 조항이건 아무 편견 없이 국민여론을 수렴해서 이 시대에 맞는 개정사항이라면 그대로 개정작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도 또 해고자 복직과 관련하여 현재 몇 명이 복직되었으며 해고자 전원을 복직시킬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해고자 복직지원은 과거에 징형 해고를 당하여 해고된 자라고 할지라도 당해 기업과 산업발전에 동참할 의지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기회를 부여해 주도록 정부가 기업주들에게 행정지도를 하

고 있는 사항입니다. 93년 4월 30일 현재 취업율, 복직을 희망하고 있는 노동자 수는 789명입니다. 이 가운데 68명이 현재 복직결정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해고자복직지도는 법적으로 당연히 보장된 권리 실현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가 복직을 거부할 경우에 이를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못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정부는 과거 노사분규와 관련해서 자기의사에 반해서 산업사회를 떠났던 노동자들이 다시 산업의 역군으로서 일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다시 산업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정부의 마땅한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각 사업주회의를 개최하고 또 권고공문을 발송하면서 각 기업이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해고노동자들을 다시 포용해 주도록 지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복직희망자들이 산업현장에 복귀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전원을 일시에 복직시킬 수 있는 어떠한 유효한 수단도 노동부가 갖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낙주** 다음은 환경처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처장관 황산성** 환경처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하 의원님께서 국제환경협약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환경기술이전문제에 관해 총리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구환경문제는 국제무역질서를 재편하는 주요한 변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환경보호를 명분으로 한 무역규제가 점차 강화될 경우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관련산업의 수출 감소 등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곤란을 초래하게 되는 문제가 예상됩니다.

정부는 무역규제로 인한 우리 경제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제환경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92년 6월 UN환경개발회의 이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구환경 관계장관대책회의를 설치하고 산업 환경 협상대책 등 3개

분야의 총 44개 과제를 선정하여 지구환경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각 부처 간에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환경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환경정기술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93년 6월에 개최 예정인 제1차 UN지속개발위원회 회의에 이사국의 자격으로 참가하여 우리나라에 필요한 이전대상기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전기술목록과 협력대상 기술목록을 현재 작성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종하 의원님께서 민간환경단체 특히 재야민간환경단체의 환경보전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환경운동을 하는 민간단체는 환경처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된 단체가 65개 그리고 소비자보호단체 등과 같이 환경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가 40여 개 또 말씀하신 재야환경단체, 즉 미등록단체가 40여 개 등 총 140여 개의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민간단체들에 대해서 각종 환경정보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정기적인 간담회와 현장시찰 등에 참여시키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환경운동연합이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같은 미등록단체도 주요 환경정책의 결정과정에 공식적으로 참여시키고 있으며 정책건의를 적극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민간환경운동단체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감안하여 기업이 환경보전 협회나 환경보전 범국민운동추진협의회의 환경운동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공익성 기부금으로 인정하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작년도에 관련세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또 정부에 등록된 환경관련 학술연구단체도 이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환경관련 단체들에 대한 세제혜택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제환경활동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민간환경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범정부적인 지구환경종합대책의 44개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여 민·관의 유기적 협조·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종하 의원님께서 향후 하수처리장·쓰레기매립지 설치계획과 폐기물을 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중하 의원께서 하수처리장과 쓰레기매립지와 같은 환경기초시설은 이제 필수적인 사회간접자본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충시켜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현재 하수처리비율은 37%, 38개소에서 가동중이며 이러한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나 96년까지는 65% 수준으로 제고시키기 위해서 74개소의 하수처리장을 신설할 계획이며 쓰레기의 위생매립을 제고를 위하여 역시 96년까지 33개의 광역매립지와 104개의 시·군 단위 매립지를 설치토록 계획을 세운 바 있으며 현재 광역매립지 중 1개소가 설치 완료되었고 11개소의 설치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폐기물을 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하고 매립되는 폐기물량을 감량하기 위해서 가연성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대도시지역에 2000년까지 열병합발전이나 지역난방을 겸한 51개소의 소각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서 현재 8개소가 추진중에 있으며 계획이 완료되면 2000년에는 현재 2%의 소각율이 27%까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중하 의원님께서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폐기물유통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할 의사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폐기물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폐자원의 발생과 수요를 연결시키는 폐자원유통정보의 원활한 제공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에 따라서 92년 7월부터 한국자원재생공사에 폐기물유통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폐자원발생업소와 재생업소 간의 유통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금년에는 이를 전국 전산망으로 연결한 폐자원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역별 폐자원정보 수급을 더욱 원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자원 유통정보와 재활용기술에 관한 국내외 자료를 수집하여 폐기물자원화 정보지를 발간 배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중하 의원님께서 생태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에 대한 남북 간 생태계 공동조사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비무장지대는 53년 휴전 이래 인간의 간섭 없이 40여 년이 흐른 결과 생태계 변화가 자연스럽게 진행되어 많은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는 독특한 생태계를 형성하여 국제적인 자연자원의 보고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92년 6월

UN환경개발회의에서 국무총리의 기초연설을 통해 비무장지대 자연생태계 공동조사를 이미 제의한 바 있으며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다룰 주요 교류협력사업의 하나로 이미 제의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동 제의가 성사될 경우에는 전문가와 민간단체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공동조사반을 구성하고 동식물 토양 등 환경 전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해서 보전지역의 지정 관리 등 남북 공동으로 생태계 보전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김기도 의원님께서 기업의 환경관련 법규 위반사례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환경문제에 대한 온 국민의 관심이 높아져 감에 따라 현재 대부분의 기업들은 오염방지시설에 상당한 투자를 하는 등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기업이 오염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하거나 노후된 시설의 개선을 지체하는 등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환경처는 폐수 무단방출에 대해서는 조업정지조치를 하고 계속해서 3회 위반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허가배출시설이 적발될 때에는 폐쇄명령을 하고 계속하여 조업할 경우에는 단전·단수조치를 하고 형사처벌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규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벌칙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한편 반복적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단속주기에 관계없이 수시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장기욱 의원 의석에서 — 장관! 조금 천천히 하세요.)

시간절약을 위해서 빨리 해 드렸습니다.

한편 오염방지시설 운영기술의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술진단 및 지원을 병행하여 환경관련 법규 위반사례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도 의원님께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저의 신상에 대해서 질문해 주셔서 국회차원에서 제 입장을 밝히게 해 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 재단에 대해서 저는 아무런 사욕이 없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는 잘못이 하등 없고 다만 유족들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서 이사

장직을 명목상 하고 있다가 공직에 임하기 며칠 전에 그 유족과 상근이사를 불러서 사표서를 냈고 그 이후에 전 독립기념관장이신 안춘생 관장님이 이사장을 대신 맡고 계십니다.

박계동 의원님께서 대기오염도를 예보하기 위한 환경처의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기오염도 예보는 대기오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대기오염농도를 사전에 일반국민에게 알려 주는 제도로서 미국과 일본 등의 일부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부 도시에서 단기오염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오염도 예보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염도 예보를 위해서는 우선 그 지역의 정확한 오염물질 배출량 및 국지적인 기상예측이 선행되어야 하며 오염도 예측모델이 개발되어야 하므로 충분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현재 대기오염 예보체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을 93년 8월 말에 이제 그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 등을 면밀히 평가해서 실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박계동 의원님께서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 추진에 따른 93년도의 부족재원 충당방안과 환경세 신설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3년도 환경개선중기계획의 총투자 소요는 2조 8000억 원이며 이 중에 공공부문이 1조 4000억 원으로서 중앙정부가 5345억 원, 지방자치단체가 8695억 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계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중에 중앙정부의 93년도 확보예산액은 3126억 원에 불과하고 계획대비 부족액은 2219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93년도에 확보되지 못한 부분은 94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라는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이러한 만성적인 재원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관계전문가에게…… 한국환경경제학회입니다, 연구용역을 의뢰 중이며 이 연구용역의 결과가 완료되는 금년 6월 이후에 이를 토대로 근원적인 재원확보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세의 신설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바 같이 연구용역의 결과에 포함되어 검토 중이며 동 연구용역은 환경세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원인자 비용부담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

과 환경공채 발행방안 등 다각적인 재원확보 수단을 종합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원인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사실을 밝혀 드립니다.

박주천 의원님께서 우리나라의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기오염물질 중에 서울의 아황산가스 농도는 80년도에는 0.09ppm이었던 것이 그동안 저황유 및 LNG 등 청정연료의 확대 공급으로 크게 개선되어서 92년도에는 0.035ppm까지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치인 0.023ppm의 2배에 가깝고 세계 주요 도시에 비해서도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년 중에 대기환경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0.03ppm으로 강화하여 관계법령을 개정하겠습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의 하천 해양에 대한 수질 환경기준은 선진국과 동일한 수준이며 이러한 기준이 계속 달성될 수 있도록 수질보전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주천 의원님께서 수도권매립지 환경영향조사 결과와 매립시설 보완계획과 반입이 중단된 산업폐기물의 임시처리를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4월 13일 수도권매립지의 환경영향조사 결과 발표 이후에 정부에서는 주민대표와 수차례의 실무협의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정부 측은 반입이 중단된 폐수처리오니와 폐가축류 중 무해한 것이 확실한 것은 계속 반입하면서 시설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입니다라는 주민들은 사업장폐기물 2종의 반입을 거부하고 있어 그동안 사업장폐기물인 폐수처리오니와 폐가축류의 반입이 지난 4월 20일부터 반입 중단되고 있습니다.

저희 처는 그동안 수차의 협의를 거친 결과 어제 5월 7일 협의회에서는 기준초과 우려가 있는 사업장폐기물의 반입은 금지 반송시키되 기준초과 우려가 없는 폐기물은 시설 보완과 병행하여 반입하는 등 다섯 가지의 사항을 협의하여 주민측과 저희 처가 합의 서명하는 즉시 종전에 반입되던 폐기물은 합의에 따라서 반입을 재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현재 양측은 합의문안 초안이 작성되었고 양측이 초안에 서명하는 일만이 내주 중에 이루어질 것으로 믿기 때문에 반입에 별 다른 지장이 없으리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행여 반입중단사태가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서 타 지역 처리시설에 이송 처리하거나 임시 보관 장소를 물색하는 등 별도의 대책 강구도 병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산업체에서 적체됨으로써 조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박주천 의원께서 특정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이의 수정 보완을 총리께 여쭙어 보았습니다.

(황낙주 부의장, 이만섭 의장과 사회교대)

지도·감독권한 이관에 따른 인원충원 필요성과 대책 등을 내무부와 적극 사전에 협의해서 행정의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섭 다음은 공보처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처장관 오인환 오인환 공보처장관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를 올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지루하지 않으시게끔 가급적이면 요점 위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협 의원님과 박계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송위원회 위원들이 중도에 사퇴한 문제와 특정인사를 방송위원장으로 내정했다는 문제에 대하여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송위원들이 사표를 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5월 10일 국회본회의 답변을 통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분명한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중순경 공보처장관이 고병익 방송위원장을 만나 방송위원회의 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는 적이 있습니다. 당시 고병익 방송위원장께서는 참고적으로 말한다면 방송위원회 위원의 임기문제는 법률로 보장된 것인 만큼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 생각대로 하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 방송위원장님을 전화로 접촉하거나 또 다시 만난 적이 없습니다. 방송위원들도 접촉한 바가 없습니다.

공보처 실무자들에게도 접촉하지 말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솔직한 진상입니다. 일부 방송가에 나돈 압력설은 전혀 근거가 없는 낭설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방송위원장을 포함하여 방송위원 8명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만 자의에 의한 사의 결정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방송위원장 내정설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위원회의 위원은 방송법에 의거하여 입법·사법·행정부로부터 3명씩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방송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민정부는 방송법의 이 같은 입법취지를 성실하게 지킬 것입니다. 앞으로 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때 직능대표성 등도 잘 나타나도록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협 의원님께서 방송사가 어린이프로그를 축소했는데 이는 시정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리고 방송사가 주말뉴스시간을 줄였는데 재고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어린이프로그램 축소문제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어린이프로그가 푸대접을 받는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12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MBC의 '뽀뽀뽀'와 같은 어린이프로그램의 평일방송이 폐지되어 많은 학부모와 시청자 노인단체 등에서 항의가 있었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프로그램이 수익성 문제 등을 이유로 소외되거나 밀려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방송사와 충분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말 뉴스시간 단축문제에 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텔레비전 방송사들이 주말 9시 뉴스, SBS는 8시 뉴스가 되겠습니다. 9시 뉴스시간을 일부 단축키로 한 것은 그동안 방송사들이 종업원들의 격무를 줄이고 또한 평일에 비해 주말에는 뉴스거리가 비교적 적기 때문에 최근 방송사 간의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한 조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말이라도 뉴스거리가 많이 생긴다면 그때그때마다 뉴스시간을 당연히 확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민자당 김기도 의원님께서 언론방송문제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그동안 조사된 사이버언론 실태를 소상하게 설명하고 대처방안도 명확히 밝히려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87년 언론기본법이 폐지되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된 이후 법정요건을 거

우 갖춘 영세부실 간행물들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 사실상 사이비언론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세언론사들은 그 존립을 위해 불법 부당한 광고강매행위나 간행물 강매행위를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고 기자에 대한 정상적인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자연히 약점을 미끼로 한 금품갈취나 이권개입 그리고 광고강요 등의 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며 비정상적인 지사 지국에서도 수없이 많은 비리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이비언론에 대한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검찰 경찰 등과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사이비언론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불법 변칙 운영행위가 드러난 언론사와 사이비기자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사법조치를 실시하고 셋째,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 고발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앞으로 생기게 될 CATV의 지역주제기자를 둘 것인지 여부에 대한 김기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유선방송법상 각 지역 종합유선방송국은 지역뉴스를 방송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내 생활정보를 다루는 방송제작진을 있을 수 있으나 기자는 둘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김 의원님께서서는 언론중재위원회의 합의율이 지극히 낮은 점을 지적하시고 확인되지 않은 투서 모함 등이 기사화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을 변론하고 구제받을 수 있게 할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입어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한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재합의율은 24% 내외로 매우 저조하여 피해구제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재합의율이 이같이 낮은 것은 중재제도에 대한 언론사의 인식부족, 소극적 자세에도 그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중재제도의 실효성, 확보장치가 미흡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야 의원님을 비롯해 학계 법조계 등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중재제도

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지방민방 허가시기, 검토지역, 규모문제와 SBS와의 관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주민의 다양한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전파채널 할당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 지역민영방송을 허가할 방침입니다.

지역민영방송국 신설은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과의 관계와 방송인력 수급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94년의 허가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방송국 규모는 현 KBS MBC의 지방국에 준하는 규모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지방민방은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설립하려는 것이므로 독립법인으로 설치 운영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SBS와 지방민방간의 관계는 이른바 계열사관계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종합유선방송의 사업성과, 사업자격요건 및 난시청지역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은 일부에서 생각하듯이 황금알을 낳는 사업은 결코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까지는 5년에서 7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중장기사업입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동산투기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인사나 부도덕한 인사들이 종합유선방송허가를 받는 일이 없도록 심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CATV 허가대상지역 중 오지의 난시청지역이 빠진 것은 그 사업성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라고 봅니다만 난시청지역에도 시범적으로 접근할 계획임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방송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인력 수급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방송인력 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미 2년 전부터 방송개발원을 통해 420명의 종합유선방송 전문인력을 양성해 왔습니다. 금년 7월부터는 프로그램 제작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며 기존 방송사의 유희인력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 의원님께서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방송기술전문대학을 신설하는 문제는 교육부와 충분한 협의를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저질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일부 드라마 쇼 코미디프로에 저질·퇴폐내용이 근절되지 못하여 많은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뉴미디어시대를 앞두고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이 불가피하고 신한국건설에 상응하는 국민적 정서를 위해서라도 점차적으로 과감하게 저질 방송프로그램을 개선할 수 있도록 방송사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상변화로 피해를 입고 있는 농어민들 관련 뉴스가 텔레비전이나 신문에서 찾아보기 힘든데 전국의 농어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뉴스의 균형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민들에 대한 기상정보 등은 결코 소홀히 취급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언론사들과 기회가 있는 대로 이 문제에 관하여 토의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일본의 수십만 명의 교포 1, 2, 3세가 미국에서와는 달리 우리 방송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타개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일본교포들의 우리 방송시청은 일부 지역에서는 가능하나 대단히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95년에 무궁화호가 발사되면 일본교포들이 우리의 위성방송을 우리 텔레비전의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박계동 의원님께서 언론방송 문제에 관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신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임기를 무시하고 KBS·MBC 사장을 경질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대통령께서는 행정부를 완전히 새로 조각하셨고 국공기업체나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의 경영진도 대폭 개편했습니다.

KBS·MBC 경영진들도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새 시대의 변화흐름을 심분 이해하고 재신임 여부를 물겠다는 뜻으로 자진하여 물러갈 뜻을

표했고 합당한 절차에 따라 새 경영진들이 선임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위원 아홉 사람 전원의 임명권을 공보처장관이 갖는 것은 언론통제를 더욱 옥죄이기 위한 수단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있는 바와 같이 종합유선방송위원회는 공중파방송의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방송위원회와는 그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종합유선방송위원회는 프로그램의 심의 등 주로 실무적인 기능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어서 정치성이 개재될 여지가 별로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위원은 법상 신분과 임기가 보장되고 직무상 독립성이 확보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단일통신사제도를 폐지하고 정보채널을 다원화시킬 계획은 없는지 물으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우리나라는 단일통신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합통신은 KBS와 MBC가 대주주로 출자하고 그 외 다수 일간신문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통신사입니다.

통신사는 광고 없이 전채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연합통신의 경우 통신전채료 수입이 운영경비의 45%밖에 되지 않아 경영상태가 지극히 취약하고 특히 일부 지방언론사에서 소정의 전채료 조차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통신사의 다원화와 관련한 박 의원님의 원론적인 말씀에 대해서는 공보처장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와 같이 통신사 경영이 취약한 상태에서 이를 다원화한다면 과거와 같은 출혈경쟁을 유발하여 심각한 경영악화를 초래하는 등 역기능이 심대할 것이 우려된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직 언론인들의 정치입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며 장관은 이러한 관행이 언론의 중립성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가 물으셨습니다.

권위주의시대 때 정권안보를 위해 언론을 통제하고 간섭하던 시절에는 언론인의 정치입문 문제가 언론의 중립성과 관련하여 시비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론

과 정부가 대등한 관계를 가지게 된 문민정부에서는 이렇다 할 쟁점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언론의 정치적 중립화를 위한 장관의 소신과 방안을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명실 공히 정통성과 도덕성을 확보한 현재의 문민정부는 과거와 같은 성격의 정권홍보를 해야 할 아무런 이유와 필요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민정부는 간섭과 규제의 구시대적 폐습을 완전히 벗어 버리고 우리 언론이 자율과 창의의 분위기 속에서 내실 있게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지원 위주의 언론정책으로 과감하게 전환했습니다.

지금은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고 있는 새 시대입니다. 그래서 문민정부는 우선 언론이 정부와 대등한 관계에서 개혁에 참여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을 뿐입니다. 언론 자신도 개혁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민정부하에서는 동반을 가장한 통제는 있을 수도 없고 절대로 있어서도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해직언론인 복직문제에 관하여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질문은 해직언론인 복직문제가 단순히 언론사와 해직언론인 당사자 사이의 관계라고 보는가 아니면 정치적 차원의 해결과제라고 보는가?

두 번째 질문은 74년 동아일보 광고사태와 75년 동아·조선 언론인 해직사태 및 80년 언론통폐합의 진상을 규명하고 해직언론인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해직언론인 복직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직언론인 문제는 기본적으로 해직언론인과 해당언론사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될 사안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다자간의 복잡한 협의과정을 거쳐야 할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조정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74년 동아일보 광고사태, 75년 동아·조선 언론인 해직사태와 80년 언론통폐합 사태의 진상규명과 해직언론인의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문제는 우선 75년 동아·조선 언론인 해직사태는 현재 당해 언론사와 해직언론인 사이에 명예회복 등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해와 용서가 필요한 이 움직임을 잘 도와주

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아픔을 잘못 건드리는 것이 모처럼 일기 시작한 화해작업에 오히려 장애가 되지 않을까를 신중하게 따져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0년 언론통폐합사태에 대한 진상은 5공청문회를 통해 많은 실상이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 문제들에 대한 특별법 제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기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섭 지금 이협 의원, 박계동 의원 두 분으로부터 보충질문신청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협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협 의원 주말 늦은 시간 보충질문 죄송합니다.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한 보충질문입니다.

첫 번째 김현철 씨의 빠짱꼬사건 관련설에 대해서 뜬소문이라고 답변을 해 주신 것은 국민의 사실인식에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본 의원의 질문은 왜 이러한 소문이 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이 뜬소문이 나오게 된 과정 또 어느 곳에서 어떤 내용의 뜬소문이었나 하는 것들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진위 평가한 결과 얻은 뜬소문이었다 하는 원인과 결론이 맞는 답변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둘째, 동화은행사건은 지금 안 행장의 비자금 이 어떻게 쓰여져 있느냐에 주안점이 맞추어져 수사가 되는 것으로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관련자들의 본명까지가 언론에 게재되는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언론인들이 검찰에 출입하면서 장관의 답변에 의하면 완전히 소설이나 쓰고 있었던 것과 같은 그러한 결과가 됩니까라는, 구체적으로 언론에 어떤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또 왜 그러한 사실 오해의 결과가 나왔는지 그 수사의 진행과정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는 질문이었음을 상기해 주시고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빠짱꼬사건은 국민들이 알기에 그 비호 세력을 색출하는 데 수사의 초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뉴스에도 이미 40여 명의 관련자가 드러났다 하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사 역시 그 관련자들의 개입 여부에 관한 그 보도과정, 사실과의 괴리, 진위 등등을 자세하게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개혁시대의 검찰의 임무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본 의원의 질문취지를 감안하시고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 민자당의 박주천 의원이 질문과정에서 본 의원이 제기한 질문사항에 대한 반박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 사회를 맡고 계셨던 황낙주 부의장의 처사는 극히 사회자로서 온당치 못했다는 의사진행 성격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보다 앞서서 저와 또 박계동 의원이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인 김현철 씨의 빠짱꼬 관련설에 관해서 국회에서 언급한 것을 놓고 청와대의 모 인사가 즉각 논평을 발표, 보도에 게재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 현장에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질문에 관해서 답변을 하고자 임무를 띠고 나온 총리의 위상을 크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처사다, 이래서 제가 아까 질문에 총리의 개혁정국에 있어서의 위상을 어떻게 갖고 있는냐는 문제제기는 다소 유용한 것이었다 하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시대에도 이 청와대가 국회를 통제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 작동시킴으로써 민주주의가 희생되어 왔던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문민시대를 자처하는 이 김영삼정권에서 행어나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다시 반복하는 그러한 가능성의 일말의 가능성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문제는 여야 없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앞으로 새 시대를 위해서 공동대처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를 보시는 황낙주 부의장께서는 박주천 의원 말에 항의하는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국회에서는 모든 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야당 의원들의 항의를 제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말을 할 자유가…… 저기 황낙주 부의장님 계시구만요. 모든 말을 할 수 있다고 하신 다음에 그 말이 틀렸다고 하는 반박을 허용하는 것은 모든 말과 그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두 가지 모순관계를 가진 것을 동시에 허용한 것이 아니냐, 이것은 사회의 오류가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의 우리 바람직한 의

정의 발전을 위해서 사회를 보셨던 황 부의장께서 깊이 생각하셔야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발언을 하신 박주천 의원님이나 그 발언을 뒷받침하신 민자당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부정부패의 척결에는 성역이 없다고 하는 발언과 대통령의 아들은 언급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발언의 모순관계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깊이 생각할 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발상의 오류가 아니냐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여야 많은 의원님들 계십니다마는 이 국회본회의 30분간 질문이라는 것이 하고 나면 간단한 것이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저도 이 사회부문의 질문을 앞두고 많은 사람을 만나야 했고 수많은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이 국민들이 우리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정부에 묻고 싶은 사항이냐 이것을 찾는 것입니다.

비록 뜬소문이라고 말씀은 하셨습니다마는 빠짱꼬사건에 대통령의 아들이 관여했다 이것 만일 국민들이 비록 유언비어지만 듣게 된다면 얼마나 경악을 금하지 못하고 궁금한 일이겠습니까?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 국회의원들이 그 국민들의 하고 싶은 소리를 대변해야 할 일이다, 옛날에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 소리를 하지 못해서 대나무밭에 가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하는 그 백성들을 대변하는 것이 바로 우리 같은 배운 사람들이요 현대에 있어서의 국회의원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밤을 지새우면서 참담한 고심 끝에 국민의 궁금증이 무엇이나를 생각해서 문제를 제기한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유언비어를 어디 의사당에서 함부로 말하느냐 하는 질타는 신사들이 모였다는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의정의 한 공간에서 용납되기 어려운 처사였다 이렇게 박주천 의원님과 또 그분의 발언을 뒷받침했던 민자당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똑같은 의원들이 이 단상에 한번 서서 국민의 소리를 대변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심에 찬 결과요 얼마나 큰 책임감을 동반하는 일입니까? 이 점을 생각할 때 다시 한 번 깊은 생각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늦은 주말에 보충발언, 의사진행성까지 결들인 발언을 허용해 주시고 조용히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만섭 다음 박계동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동 의원 늦은 시간에 이렇게 보충질문을 하게 되어서 정말 대단히 선배 의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렸던 요지는 총리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드렸습시다마는 총리께서…… 저 자신도 원고를 작성할 때 총리께서 연만하시다는 것을 감안해서 주관식도 아니고 4지선다형도 아니고 OX형으로 말씀드렸는데 보좌하시는 분이 어떻게 된 일인지 핵심은 다 비켜가 버리고 추상적으로 답하시기에 다섯 가지 OX형으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12·12사태는 쿠데타냐 합법적 군사행동이나. 둘째, 광주민주항쟁은 폭동이나 아니면 민주항쟁이나.

셋째, 희생자에 대해서는 국가배상 차원이어야 하느냐 아니면 보상차원이어야 하느냐.

넷째, 지자체가 연기되고 있는 것은 총리로서, 정부를 대표하는 총리로서 위법이라고 생각하느냐 합법이라고 생각하느냐.

다섯째, 6공비리 청문회와 관련해서 총리는 회의에서 여야의 합의로 마련할 것을 요청하셨습시다마는 민주당의 의석수가 적다 보니 정말 정부의 협력을 받지 않으면 6공청문회가 불가능하다는 의미에서 정말 진정 과거를 청산하려고 하는 의지 속에서 6공청문회 개최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섯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법무부장관께서 앞으로 전향적으로 정말 김영삼 대통령이 오랜 우리의 민주화운동의 성과 위에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럴 때만이 더욱 김 대통령이 더 영광스러울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짧은 시간 내에 사면과 복권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우리 행형법에 대해서 한마디 묻고자 합니다.

우리 행형법은 일제 행형 그대로를 아직도 지구 하나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형자들에 대한 집필허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소자의 삭발문제입니다.

집필허가는 정말 부정사신을 보낼 우려 때문에

방지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제 행형관리를 좀 더 과학화해서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재소자 삭발문제는 우리 형이 정말 응보형에서 교육형으로 그리고 좀 더 인간적인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재소자 삭발도 우리 행형의 과학화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하겠습니다.

가령 아버지가 박박 깎은 모습을 아들이 보게 한다든지 아들이 박박 깎은 모습을 아버지가 보게 한다든지 이런 일은 이제 더 이상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공보처장관에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공보처장관은 종합유선방송위원회는 정치성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다지 공보처장관이 종합유선방송위원회 9명의 위원을 전원 공보처장관이 선임을 해도 별문제 없겠다 하는 취지로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향후 아마 우리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유세도 TV유세가 될지도 모르고 이것이 종합유선방송법안에 의해서 케이블TV가 실시되면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 지금 현재 종합유선방송법안도 자주방송채널을 한 채널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본 의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선거구의 라이벌이 이원종 공보처장관인데 자주방송을 통해서 지역로컬뉴스를 내보내면서 이원종 차관은 매일 열심히 활동하는 것같이 보도하고 박계동 의원은 별로 활동이 미미한 것 같이 보도되어진다면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공평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절대 자주방송채널이 의무화되고 있는 가운데서 종합유선방송위원회가 전원 9명…… 공보처장관이 임명한다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종합유선방송위원회법안의 개정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직언론인의 장·차관, 국회의원들 바로 인입되어지는 이 문제도 저는 직업윤리관으로 보나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 공보처장관께서는 바로 현직에서 장관으로 발탁되셨기 때문에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적어도 현직 언론인은 3년 내지 5년 동안에는 공직에 그대로 발탁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

지 않으면 공직사전예약제 비슷하게 ‘당신 잘 협조하면 다음에 장관 주겠소’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언론의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장관의 더욱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선배 의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섭** 보충질문에 대해서 먼저 국무총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인성**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섯 가지 조목조목 질문을 다시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12·12사태는 군사쿠데타인가 아니면 합법적인 군사행동인가 하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13대 국회에서 청문회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된 것으로 압니다. 당시의 특수한 그런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군사적인 행동이었다고 봅니다. 현재까지는 위법사항은 아니다 하는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요!」 하는 의원 있음)

(「왜 위법사항이 아니요? 쿠데타지!」 하는 의원 있음)

다음 두 번째 질문은 광주민주화……

(장내 소란)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은 불순세력의 사주에 의한 시민의 폭동인가 아니면 광주시민의 민주항쟁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광주사태는 현재 정부로서는 민주화운동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2·12 사태도 쿠데타지!」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세 번째 질문은 정부의 물질적 정신적 위로는 국가배상인가 혹은 국가보상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광주민주화운동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국회에서 정한 법에 따라서 보상조치를 해 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다시 이 문제와 관련한 새로운 입법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현재로서는 국가보상으로써 처리해 오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법이 정한 기일 내에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위법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정치분야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을 해서 국회에서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다루어서 거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국회청문회 구성에 관한 총리의 견해를 다시 물으셨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검토하고 또한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역시 청문회문제는 국회 안에서의 청문회를 말씀하신다고 하면 이는 국회에서 결정해 주실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족합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만섭**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김두희** 법무부장관입니다.

이협 의원님께서서는 빠짱꼬사건 수사 또 동화은행 수사와 관련한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대통령의 영식문제와 관련해서 뜬소문이 나온 경위를 물으셨습니까. 검찰에서는 지난 3월 하순부터 진행하고 있는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그런 내용이 전혀 나온 바 없으며 전혀 근거 없는 뜬소문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검찰로서도 그와 같은 소문이 나온 경위를 전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동화은행사건의 비자금 행방에 관해서는 현재 검찰에서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그 행방에 관해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수사과정을 통해서 철저히 면밀한 수사를 전개해서 그 행방을 규명할 것입니다.

또 빠짱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연일 정치권 인사와 검찰 경찰 안기부 등 수사정보기관의 인사가 이 사건의 비호인물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비호인물은 없습니다.

검찰로서도 확인되지 않은 풍문이나 추측을 근거로 해서 연일 언론에서 보도를 하는 바람에 수사에 장애가 초래되고 관계인의 명예에도 심대한 영향을 주고 있어서 언론의 이와 같은 추측보도

를 지양해 주도록 강력하게 요청하였다는 보고를 오늘도 또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금구좌추적이라든지 빠징꼬업소 지분소유자에 대한 수사를 포함하여 철저한 수사를 해서 비호세력 유무와 관련자를 반드시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박계동 의원님께서도 행형법 중 집필허가 관련규정과 삭발규정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바람직한 행형의 방향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법무부로서도 행형법 관계조항이 시대의 변천에 따라 여러 가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현재 행형법 개정연구반을 구성해서 여러 문제조항들을 검토 중입니다.

그 검토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섭 다음 마지막으로 공보처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처장관 오인환 박계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두 가지 점에 대해서 공보처장관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위원 9명을 공보처장관이 임명하는 문제는 과연 정치성이 없는가 해서 유세기사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는 종합유선방송의 지역뉴스는 지역의 생활정보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심의기능을 강화한다면 유세기사라든가 정치성 있는 기사가 들어갈 수 없게끔 얼마든지 규제를 철저히 할 수 있다 해서 걱정하신 그 공정성이라든가 정당성문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유선방송법이 무조건 잘된 법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해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개정할 수 있다 하는 원칙론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언론인의 정치참여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인으로서 현직을 떠난 지 1년 내지 2년이 지난 뒤에 정치참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 학계에서 나온 이야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 언론계에서도 상당히 그것을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많은 언론인들이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생겼던 역기능에 대한 역사적 반성이다 이렇

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언론의 중립성 이 문제에 관한 박계동 의원의 주장은 매우 일리가 있고 그 원칙론에 대해서는 공보처장관 개인으로서는 반대하지 않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섭 답변은 끝났습니다마는 민주당의 이해찬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찬 의원 오늘 토요일 오후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야 될 시간이신데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렇게 바쁘신 선배 의원님들 붙잡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웬만하면 의사진행발언을 안 하고 오늘 본회의 대정부질문을 무난히 참 여당으로서는 별 쟁점 없이 잘 끝내는가 싶은 안도감을 가졌을 것 같은데 유감스럽게도 김영삼정권의 총리께서 상당히 중대한 역사적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으로서 몇 가지 말씀을 존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영삼정권이 역대 전두환·노태우정권과 크게 다르다는 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시대의 정치적인 현대사에 대한 역사인식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자당정권에서 탄생한 정권이기 때문에 6공 1기니 2기니 하지만 그래도 이 김영삼정권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고 한다면 민정당 공화당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져 온 이 정권과는 달리 문민정부로서 국민적 선출에 의해서 적어도 분단사를 정리해야 하는 한 새로운 정권이기 때문에 국민들 기대가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현대사 45년의 역사 속에서 전반기가 분단 속에서 쿠데타가 반복되는 군부독재의 비극의 역사였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냉전이 해소되어 가는 속에서 새로운 역사의 인식하에서 새로운 의회주의와 새로운 민주제도를 확립해 나가는 하나의 전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21세기를 앞둔 이 시점에 있어서 김영삼정권의 역사적 소임은 바로 그런 과도기적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본 의사당에서 황인성 총리께서는 12·12 사태가 당시 국가위기상황에서의 합법적인 행위였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당

시 상황에 대해서 제가 장황하게 설명 말씀 드리 지 않겠습니다.

또 광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광주사태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13대 국회에서 그 명칭을 놓고서 여러 가지 고심 끝에 나온 것이 타협의 산물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사태라고 하는 폭도로 광주시민들의 항쟁을 폄하하는 그런 용어를 현 정부의 총리가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쓴다고 하는 자체가 새로운 역사인식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다라는 점을 우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12·12를 합법사태라고 하면 지금까지 광주특위에서 다룬 것은 전부 소용없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언론에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에 대한 자세한 취재가 모든 도하 신문에 자세히 실리고 있습니다. 그 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당시에 정승화 참모총장이 현 김영삼 대통령의 선거운동원으로 87년 대통령 선거에서 그 12·12의 전모를 일단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분이 그 당시에는 대통령선거에서 떨어졌지만 그 민주화운동을 했던 지난 역사적인 경륜을 국민들이 다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서 이제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12·12가 합법이라고 한다면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의 87년 대선 때의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김영삼정권에 의해서 초대총리로 임명되셔 가지고 12·12를 합법이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끌던 사단은 부대를 이탈해서 서울까지 탱크를 몰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누가 그것을 합법적으로 명령을 했습니까? 누가 그것을 합법이라고 지금까지 인정을 했습니까?

또 총리가 이성을 잃은 것이 아니고 이성은 분명합니다.

역사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된 점을 청산하고 새로운 것을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은 인정하고 그것이 위법이나 적법이나를 따지기 이전에 앞서서 그것은 역사적인 과오였다는 것을 이제 인정하고 가능한 한 그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뒤로

미루고 진실만 밝혀서 이제는 좀 정리해 나가자는 것이 13대의 소임이었고 14대에서는 그보다 조금 더 발전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도 아닌 총리께서 완전히 거꾸로 뒤집는 이런 발언을 어떻게 답변을 사석도 아니고 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까?

여기 계신 황낙주 국회의부의장께서도 국회등원을 하시다가 총칼로 저지가 되어 가지고 등원을 못 했던 사진이 실려 있고 그 사진이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황 총리께서 제시하면서 과거 민주화운동의 좋은 기념비적 사진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황낙주 부의장께서……

이렇게 지나간 일에 대해서 처벌적인 차원이 아니고 진상규명과 청산과 반성의 차원에서 해 나가자고 하는 것이 14대의 한 문명정치시대의 한 소임인데 총리가 합법했다고 한다면 앞으로 모든 국가적 위기라는 상황을 핑계를 대면서 이루어지는 군부쿠데타가 다 합법이 되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육사를 졸업을 하시고 군 경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다 합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명백하게 내란죄에 해당하는 행위였습니다.

당시 주영복 국방부장관도 내란죄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언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삼정권의 초대총리가 합법했다고 다시 강변하신다면 이제부터 그 진상규명은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장내 소란)

저는 그 당시에 큰 피해자, 피해당사자인 한 분인 장태완 장군이 최근에 그 문제에 관해서 법률적인 제소를 하겠다고 하는 신문 기사를 얼마 전에 보았습니다. 이 법률적인 제소를 피해자인 당사자가 하고 있는데 총리가 재판의 결과를 보지도 않고 합법이라고 규정한다고 한다면 제소 자체를 봉쇄하겠다는 뜻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저는 6공정권의 총리의 이런 역사인식을 보고 또 지금 본회의장에서 발언권도 없이 의사진행발언이라고 반말로 해 대는 민자당 의원들에게 정말로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시오」 하는 의원 있음)

제 얘기를 들으십시오. 이렇게 자……

(장내 소란)

신재기 의원 좀 조용히 하십시오.

(장내 소란)

- 의장 이만섭 자, 모두 조용하세요.
이해찬 의원 말씀 들으세요. 조용하세요.
- 이해찬 의원 의장이 조용히 하라고 하지 않아요.
- 의장 이만섭 조용하세요. 모두 조용하세요.
- 이해찬 의원 하순봉 의원 좀 조용히 하십시오.
- 의장 이만섭 조용하세요. 조용하게요.

(장내 소란)

- 이해찬 의원 자, 조용히 하십시오.
- 의장 이만섭 자, 이해찬 의원 발언 계속하세요. 조용하세요.
- 이해찬 의원 저는 이렇게 6공정권의 총리께서 이런 발언을 한 점에 대해서 이제는 이 본회의장에서 이런 발언이 있음에 대해서 국민을 대표하는 이 14대 국회에서 총리의 발언은 지금까지의 국회의 활동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국회의장께서는 총리로 하여금 그 발언에 대해서 사과할 수 있도록 다시 기회를 주시고 국민에 대해서 사과할 뿐만 아니라 답변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는 기회를 국회의장이 다시 줄 것을 의사진행발언으로 요청을 하면서 민자당 의원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리건대 그렇게 역사를 왜곡하는 이런 총리에 대해서 민자당 의원들께서도 함께 다시 사과를 받는 그런 기회를 가져줄 것을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속기중단)

- 의장 이만섭 황 총리, 지금 이해찬 의원 의사 진행발언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어요?

그러면 황 총리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이 무슨 말을 물어보고 합니까?」 하는 의원 있음)

말씀을 하신다니까 좀 조용히 하라니까요.

- 국무총리 황인성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2·12 사태에 대해서 합법이나 혹은 불법이나 하는 질문에 대한 제 답변을 드린 것은 그것이 우리 국가발전 또는 민주화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태였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5공 6공으로 이어져서 현재 모든 국가에 지금 경영이 또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역사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조명이 될는지

하는 것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불법은 아니다 하는 그런 해석을 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내 소란)

그 다음에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제가 며칠 전부터 이 자리에서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혹 제가 그때 당시의 사태를 광주사태라고 이렇게 지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이렇게 정정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소란)

- 의장 이만섭 이것으로서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로써 5일간에 걸친 대정부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새 정부가 출범한 후 처음 갖는 것으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국무위원들은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질문과정에서 논의된 문제점, 개선해야 할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새 정부의 개혁정책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동안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0차 본회의는 5월 18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

○출석 의원 수(252인)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국무총리	황인성
내무부장관	이해구
법무부장관	김두희
교육부장관	오병문
문화체육부장관	이민섭
보건사회부장관	송정숙
노동부장관	이인제
총무처장관	최창윤
환경처장관	황산성
공보처장관	오인환

○출석 정부위원

교육부차관	이	천	수
보건사회부차관	최	수	병
환경처차관	김	형	철

【보고사항】

○상임위원 해임

위원명	해임위원회	해임연월일	해임사유
이만섭	외무통일	93년4월27일	의장선출

○상임위원 선임

- 재무위원회
 - 민주자유당
 - 손학규
 - 경제과학위원회
 - 민주자유당
 - 강경식
 - 문화체육공보위원회
 - 민주자유당
 - 박종웅
 - 건설위원회
 -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 박준규
- (5월 7일 자)

○상임위원 사임 및 보임

위원명	사임위원회	보임위원회	교섭단체
김용태	법제사법	문화체육공보	민주자유당
곽영달	행정	국방	"
곽정출	행정	건설	"
이상재	내무	건설	"
김범명	재무	경제과학	"
김영구	경제과학	교육	"
성무용	경제과학	상공자원	"
김동근	교육	외무통일	"
김정수	교육	재무	"
나응배	교육	외무통일	"
김두섭	농림수산	교육	"
이해구	농림수산	행정	"
김상구	상공자원	내무	"
김효영	상공자원	법제사법	"
원광호	상공자원	행정	"
백남치	노동	교통체신	"
장영철	노동	농림수산	"
강삼재	교통체신	보건사회	"
송광호	건설	교육	"
이민섭	건설	교육	"
변정일	법제사법	교통체신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김복동	외무통일	상공자원	"
김용환	재무	노동	"

위원명	사임위원회	보임위원회	교섭단체
강부자	경제과학	문화체육공보	"
정몽준	국방	경제과학	"
정장현	교통체신	법제사법	"
정동호	건설	노동	"

(5월 7일 자)

○의안 제출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안

(5월 7일 정부 제출)

5월 8일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

○청원 제출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관한 청원

(5월 3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가 25-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변형윤 외 3인으로부터 이철 의원의 소개로 제출)

요지

1.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규정내용은 공직자의 부패방지에 미흡하므로 동 법을 보다 실효성 있고 국민정서에 부응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여 주기 바라는 내용임
2.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부정행위방지과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규정내용이 동 법 취지를 구현하는 데에는 미흡하므로 이러한 취지의 확실한 구현을 위해 아래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건의안을 제안하니 동 법 개정예 반영하여 주기 바라는 청원임

가.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의 확대

나. 등록사항의 확대

다. 재산등록기관의 다원화

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실질화

마. 재정신청제도의 도입

바. 등록재산공개제도의 실질화

사. 처벌규정의 신설 및 강화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음

해직철도공무원 복직에 관한 청원

(5월 4일 경기도 부천시 중구 중동 주공아파트 33-308 김창한 외 2인으로부터 한화갑 의원 외 4인의 소개로 제출)

요지

1. 철도기관사 파업을 주도하다 해직된 철도공무원의 복직을 위해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여 주기 바라는 내용임
2. 청원인들은 철도기관사로 근무 중 88. 7월

철도청의 과중한 업무 부여에 항의, 철도기관 사파업을 주도하다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철도청으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은 자들로서 93. 3월 이들은 대통령특별대사면조치로 사면 복권이 되었는데 정부는 최근 노동부지침을 통해 대통령특별대사면으로 풀려난 해고근로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복직시키도록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으나 청원인들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제한규정(파면처분을 받은 자는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채용불가)으로 인해 복직이 어려운 실정인바, 다른 해고근로자와의 형평을 고려 해직철도공무원들도 복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개정하여 주기 바라는 청원임

소개의원 : 조홍규 이부영 신기하 정균환
5월 7일 행정위원회에 회부

○서면질문서 제출

신섬진교 부실발생에 관한 질문서

(4월 30일 박희태 의원 제출)

5월 1일 정부에 이송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수입밀에 관한 질문서

(5월 1일 김병오 의원 제출)

5월 3일 정부에 이송

군수품중계업체현황에 관한 질문서

(5월 3일 김진영 의원 제출)

한약원자재 수입·수출에 관한 질문서

(5월 3일 박경수 의원 제출)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질문서

(5월 4일 김말룡 의원 제출)

이상 3건 5월 6일 정부에 이송

○서면답변서 제출

정부기관 문서기록보존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보건행정 및 환경정책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갑근세 납부실적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소도축부산물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이상 4건 4월 30일 정부 제출)

군지휘관 판공비와 무기체계 등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감사원의 처분요구와 안기부관련 고소·고발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

(이상 2건 5월 3일 정부 제출)

이상 6건 질문서와 함께 부록에 실음